

연구보고서 2008-23-6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 지방재정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

Establishing a Databas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 Local Expenditure Budgets

고경환
이상운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 지방재정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08-23-6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고경환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28-2 93330

머리말

최근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의 확대에 따라 정부나 학계 또는 국민은 예산의 지출 분야, 그 규모와 변화추이 등의 분석에 대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부터 도입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을, 행정안전부는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의 행정과 재정을 통합 구축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국가재정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분석 및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재무정보나 사업별 모니터링을 포함한 체계적 재정분석들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정보시스템은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먼저 세출 예산의 세부 기능별 분류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이후에 대해서만 제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내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간 연계분석에 분절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품목별 예산제도 시기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분석을 할 수 없다. 즉 품목별 예산제도 시점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연계성이 없어 통합분석 등 다양한 세부정보를 분석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시스템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품목과 사업예산제도간의 연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복지재정DB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세부 통계들이 분석 및 제공되기를 기

대해 본다. 특히 사회투자의 각 영역별 기능별 분석과 추이 등을 통해 사회재정지출의 투자방향, 투자규모, 투자우선 순위 등 정책결정에 도움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어 향후 복지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정부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복지예산을 배분함에 필요한 비교 및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복지부문의 정책수립 또는 연구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수립자, 정부의 재정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임완섭 선임연구원, 원외의 이상운 (재)자치경영정보원 상무이사가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각 부분의 펼침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고경환)

제 II 장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범위(일차년도 보고서)

제 III 장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 추진전략과 방안(이상운, 고경환)

제 IV 장 복지재정 DB구축과 과제(고경환, 이상운, 임완섭)

제 V 장 요약 및 연구의 한계(고경환)

본 연구에 대한 검독을 통하여 연구에 소중한 조언을 하여주신 유근춘 연구위원과 홍석표 연구위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원고정리를 도와 준 강지원 연구원, 자료정리 및 보고서 편집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영애선생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복지재정의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 유용한 기초자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목 차

Abstract	11
요 약	13
I. 서 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2. 연구내용과 방법	19
II.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범위	21
1. 사회복지재정 관련 용어와 쟁점	21
2.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23
3. 사회복지모형으로 본 범위	31
III.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 추진전략과 방안	41
1. 지방자치단체 DB구축환경	41
2. DB구축의 추진방향	52
3. DB구축의 추진단계	55
4. 효율적인 DB구축방안	65
IV. 복지재정 DB구축과 과제	85
1. DB구축의 내용	85
2. DB구축의 내용과 분석방향	86
3. 구축된 DB의 성과와 결과분석(2004~2006)	96

V.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105
참고문헌	111
부 록	113

표 목 차

〈표 II- 1〉 권순원의 생산적 복지정책	33
〈표 II- 2〉 정경배의 발전적 균형정책	36
〈표 III- 1〉 품목별·사업별 예산제도의 비교	48
〈표 III- 2〉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의 계산방식	54
〈표 III- 3〉 DB구축의 단계	55
〈표 III- 4〉 이용대상자별 시스템 요구사항	58
〈표 III- 5〉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인력	59
〈표 III- 6〉 지방자치단체 DB구축 범위	65
〈표 III- 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유형	66
〈표 III -8〉 2007년도 이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구조	68
〈표 III- 9〉 2008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구조	69
〈표 III-10〉 품목별 재정구조와 사업별 재정구조의 비교	70
〈표 III-11〉 사회복지재정지출 DB구축의 관리체계	72
〈표 III-12〉 기본구조·기능구조·세부기능구조와의 관계	73
〈표 III-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체계	73
〈표 III-14〉 DB구축시점 선정유형	75
〈표 III-15〉 DB구축 소급시점 적용방안 비교	75
〈표 III-16〉 순계와 총계, 예산과 결산의 적용 기준	78
〈표 III-1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지출 DB구축 양식	81
〈표 IV- 1〉 지방복지재정 Data Base구축의 내용 및 사용자료	87
〈표 IV- 2〉 사회복지재정의 세부 기능별 분류	88
〈표 IV- 3〉 기능별 분류의 관련 제도	89

〈표 IV- 4〉	사회복지재정 DB구축의 체계	92
〈표 IV-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준 측정 변수	94
〈표 IV- 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준 유형화 변수	95
〈표 IV- 7〉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구조 간 연계성 : 기능별	97
〈표 IV- 8〉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구조간 연계성: 재원별 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	99
〈표 IV- 9〉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의 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100
〈표 IV-10〉	세항구조에 ‘기초생활보장’이 없는 자치단체	101
〈표 IV-11〉	사회복지재정의 예·결산 규모 비교	102
〈표 IV-12〉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재정투자비율 순위(2006)	103
〈표 IV-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06)	104

그림 목차

[그림 II- 1] IMF의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27
[그림 II- 2]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지출 범위의 비교	30
[그림 II- 3] 박천익(2000)의 한국형 복지모형	34
[그림 II- 4] 운영진 외(2006)의 한국형 사회복지모형 : ‘3 fare 모형’	38
[그림 III- 1] 품목별 지출예산 과목구조 체계	45
[그림 III- 2] 사업별 예산구조	46
[그림 III-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재정구조 체계	49
[그림 III- 4] 사업별 예산제도 재정구조 체계	50
[그림 III- 5] 품목별 · 사업별 재정구조의 체계비교	51
[그림 IV- 1] 사회복지재정시스템 : 지출측면	86

부표 목차

〈부표 1〉	사회복지분야의 재원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4년	115
〈부표 2〉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4년	116
〈부표 3〉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4년	117
〈부표 4〉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결산규모: 2004년	118
〈부표 5〉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결산규모: 2004년	119
〈부표 6〉	사회복지분야의 재원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120
〈부표 7〉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121
〈부표 8〉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122
〈부표 9〉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결산규모: 2005년	123
〈부표 10〉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결산규모: 2005년	124
〈부표 11〉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의 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125
〈부표 12〉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재정투자비율 순위: 2005년	126
〈부표 13〉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127
〈부표 14〉	사회복지분야의 재원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128
〈부표 15〉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129
〈부표 16〉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130
〈부표 17〉	세항에 '기초생활보장'이 없는 13개 자치단체(2005)	131

Abstract

Establishing a Databas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 Local Expenditure Budgets

Recentl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perates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e-Hozo, Hozo is the traditional political institu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 works from organization to executive, evaluating, and settlement the whole process of financial activities. The system is beneficial the entire flow the local expenditure and is available the statistical analysis. However, this system has some problems.

First, only after introducing(in 2008) the project budget system it is able to functional category of the expenditure budget. Therefore, it is difficult not only to link but also to analyze item budget data(before 2007) to item budget data. Because of this it is disconnected the financial trends or analysi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difficult to produce a variety of detail information through the cross-linking analysis with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build the Local Social Expenditure Database that link the item budget system (2007 or earlier) to the project budget system (since 2008) and among general governments' social expenditur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to manage, evaluate, analyze etc.

Range of database is based on Korean social expenditure model that

include from th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curity to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education policy, housing and community, etc. The range of Database include all the local government social spending, targets are all the 234 Municipal Governments included. The collected Data are available since 2004 to consider dividing functional category in detail. When it is used the gross amount and the net amount to identify the soci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we choice how to select the gross amount in this research. DB is 3 layers build the basic structure, functional structure, and detailed functional structure.

The outputs of the Korean Local Social Expenditure Database is as follows. First, DB enable us to link the item budget structure(2004-2006) to the project budget functional categories. Second, DB enable us to categorize and identify the scale of the subsidized projet and own business of the local government independently. Thus using this outputs, we will make more sufficient researches to analysis and compare among budgets or governments. Based on this researches, DB enable us not only to identify the size of budget and account in 234 local governments, but also analyze the functional categories of budget and account in detail. In conclusion, we compare the investment prioriti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요 약

1. 연구의 목적

- 국가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정보시스템들은 도입 단계인 만큼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간 연계분석에 분절이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품목예산제도(2007년도 이전)와 사업예산제도(2008년도 이후) 간 연계분석 및 일반정부간(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연계분석할 수 있는 복지재정 DB의 구축에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설정
 - 선행연구 검토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IMF기준으로 설정.
- 복지재정 DB구축의 추진전략과 방안수립
 -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구조 비교 및 연계분석 추진
 - DB구축의 구조체계 설정 : DB구축의 구조는 기본구조, 기능구조, 세부기능구조로 계층화.
 - 기본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분류
 - 기능구조는 2008년부터 사업별 재정구조로 변화한 자치단체의 사업별 분류
 - 세부기능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구조에 의해 분류된 하위구조로

14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세부적 공통단위

- DB구축의 시점(始點) 결정 : 기초자료수집과 사업별 예산제도(2008년 이후)와의 비교를 위해 2004년으로 함.

□ 복지재정 DB구축

- Data Base구축은 2004년, 2005년의 예산총계 및 결산총계와 2006년도 예산총계에 대해 구축

3. 구축된 DB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품목별·사업별 예산구조 간 연계성을 확보함. 구축된 DB로 품목별 예산구조(2004~2006)를 사업별 예산구조의 기능별 분류와 동일하게 분류.
-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기능별 분류 및 규모 파악. 그동안 국고보조금 규모의 파악은 가능하였으나 지방정부의 기능별 자체사업 규모는 분석하기 어려웠음.
- 234개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기능별 규모의 분석과 비교. 이러한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투자의 규모를 기능별로 비교.
- 예·결산 규모의 분석과 비교. 2005년도 사회복지재정분야의 예산규모는 29조 9,320억원, 결산규모는 29조 2300억원으로 나타남. 결산규모는 예산규모의 97.0%를 집행한 것을 알 수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투자의 차이 비교.
 - 전체재정 중 복지재정의 비율 : 이 분석은 복지투자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배분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비교를 통해 경쟁유발을 통한 사회복지기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1인당 복지지출액 :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인구구성과는 관계없이 전주민의 수를 반영한 평균적인 복지수준으로 인구규모를 감안 자치단체 간 비교지표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사업의 실시와 확대를, 사회인적 투자를 위해 보육지원의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학계 또는 국민들은 예산의 지출 분야, 그 규모와 변화추이 등의 분석에 대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부터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을,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의 행정과 재정을 통합 구축한 원-스톱 포털 시스템인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 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은 국가의 재정활동 중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를 집행하고 결산하는 전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예산·국세·한국은행(국고) 등 20개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종전의 수작업체계가 전산체계로 전환되는 등 재정관리업무 전 과정이 정보화되었으며, 2003년 1월부터 전면 운용에 들어갔다. 다음으로 예산정보분석DB시스템은 기획예산

처가 과거의 예산확정자료(1994년부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규모 현황과 소관, 회계별 시계열 현황 조회 등이 가능하다.

이들 시스템은 국가재정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분석 및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재무정보나 사업별 모니터링을 포함한 체계적 재정분석들이 가능하다. 특히 세출예산을 세부 기능별로 제시하는 등 앞으로 기초통계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먼저 세출예산의 세부 기능별 분류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이후에 대해서만 제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 시기(중앙정부는 2006년·지방정부는 2007년도 이전)에는 세부 기능별 분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간 연계분석이 어려우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끼리 재정의 추이나 분석에 분절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다음 품목별 예산제도 시점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품목별 예산제도 시점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연계성이 없어 통합분석 등 다양한 세부정보를 분석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단위에서 연차별 세부 추이분석이나 기능별 분류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재정시스템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품목과 사업예산제도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사회복지재정 통계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사회복지재정 관련 DB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국가재정이 어떻게 구성 및 분류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구축하면서 분류상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시적으로 볼 때 국

가전체 예산,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국비지원 규모, 중앙정부의 자체사업 규모, 지방정부의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규모 등의 분석과 DB화를 위한 연구이다. 다음 미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세부적 차원의 기능별, 사업성격별, 성질별, 재원별 등의 분석과 DB화를 위한 연구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재정운형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해야하는 만큼 '기존의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자료의 data base화를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5차 년도에 걸쳐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1차 연도에는 복지재정의 이론 정리(개념, 범위 등)와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차 연도에는 지방정부의 품목예산¹⁾과 사업예산²⁾제도의 연계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3차 연도에는 중앙정부 및 국가단위의 사회재정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에, 4차 연도에는 사회재정투자의 공개Program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 5차 연도에는 사업 완성을 위한 제반 활동과 Homepage상에서 페이지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년도에는 최신자료 갱신(Update)과 공개 Program개발과 개선이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차연도 연구로 지방정부의 사회재정투자의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제도의 연계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여 본다. 기존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은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변경하면

-
- 1) 품목예산이란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지출대상(품목)이란 예산과목의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본급·수당...(인건비), 관서운영비·여비...(물건비), 보상금·출연금...(경상이전) 등의 투입(input)요소를 지칭한다. 품목별 분류는 예산액을 지출대상별로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배정함으로써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통제형 분류방법이다.
 - 2) 사업별 예산이란 "예산을 추진하는 사업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의 사업성과에 치중하는 예산으로서 예산대비 얼마의 성과를 얻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사업별 예산은 중앙정부가 2007년부터 지방정부는 2008년도부터 본격시행 된다.

서 지방재정을 세부 기능별로 발표하고 있다. 다만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되어 왔던 2007년도 이전의 재정자료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연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중 사회복지분야에 국한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특성을 분석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차별성을 두었다.

먼저 2007년도 이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단순히 대분류 단계에서만 분류하던 기능들을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의 세부 분류 차원과 일치하도록 실시한다. 이러한 연계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는 이유는 국가재정의 보조금 관련 이중계산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와 현재의 기능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세부기능별 지방정부의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금과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규모 등의 추이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 지방정부의 특성변수를 연계하였다. 즉, 전체지역주민 수(신생아, 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인구수, 장애인구수, 세입예산규모(자체수입, 자주재원),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 간 '연계성 있는 Tool'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품목예산제도(2007년도 이전)와 사업예산제도(2008년도 이후) 간 연계분석 및 일반정부간(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연계분석 할 수 있는 복지재정 DB의 구축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달성되면 사회재정지출과 추이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거시적, 미시적)이 가능할 수 있는 DB구축이 가능하리라 본다. 결국 이는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DB로 구축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기초가 되리라 본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재정

통계의 다양성과 시의성 있는 제공으로 대국민 통계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복지수준의 비교를 통해 선의의 경쟁유발로 지역간 복지 불균형(또는 격차) 해소에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배분의 준거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계는 품목별 예산구조와 사업별 예산구조의 연계분석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을 위한 연구 내용으로는 세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부재정지출(IMF GFS 기준)의 포괄 범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범위의 구성사업과 이들의 분류기능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정부재정지출(IMF GFS) 중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복지, 그리고 주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능을 단순히 대분류 단계에서 벗어나 세부 기능별로 중분류 하였으며 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연계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사업의 독자성과 중앙재정과의 연계성 분석을 실시한다. 사업의 독자성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을, 사업의 연계성은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금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방정부지출의 다양한 측면의 분석 가능성을 검토하여 본다. 다양한 차원으로는 활동영역을 기능별, 회계별, 재원별, 사업별, 그리고 재정의 성질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전체지역주민 수(신생아, 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인구수, 장애인

구수, 세입예산규모(자체수입, 자주재원),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등이다.

또한 기초자료 구축은 3개의 기본분류와 13개의 기능별 분류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최근 3년(2004~2006년)의 자료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표 IV-2 참조). 끝으로 본 문의 요약과 DB구축의 한계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내외 문헌고찰이다.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재정의 범위와 개념, 사회복지재정의 예산과목의 체계 등을 살펴본다. 국외문헌으로는 IMF의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LO의 *The Cost of Social Security*, 그리고 OECD의 *Social Expenditure*들을 살펴본다. 다음 지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자료의 DB나 예산관련 공표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다. 본 연구의 진행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Home Page의 '재정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Home Page 등을 분석하여 본다. 이어서 외부 전문가와 공동연구이다. 정부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한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주어진 연구기간에 연구목적 달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끝으로 관계전문가와 간담회의 개최를 통해 연구추진 중 쟁점내용들을 토론하여 한계점을 해결하거나 개선점을 탐색한다.

Ⅱ.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범위³⁾

1. 사회복지재정 관련 용어와 쟁점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용어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재정, 사회보장재정,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비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범위,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및 추계방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추계과정에서의 포괄범위도 각양각색이다.

학자들과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드러난다(윤영진, 2007). 하나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재정, 예산, 지출, 비용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개념과 관련하여 어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다. 이러한 개념적 범위의 차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이고 맥락적 측면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여 그것을 상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사업이나 사회보장은 중간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 위치시킬 수 있

3) 본 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 2007의 제Ⅱ장 내용(윤영진·고경환 집필)을 발췌한 것이다.

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인 듯하다(윤찬영, 2003: 83). 따라서 사회보장법, 사회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은 그 내용상 사회복지법을 구성하는 하부영역의 법들이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사회보장보다는 사회복지 개념이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3)도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사회보장, 보건위생, 노동, 교육, 주택 등 생활과 관계되는 공공정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그 범위도 생활과 관계되는 사회적 서비스 전부로 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보장은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생활수준이 저하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적 제도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용어로 사회보장보다는 사회복지의 재정, 지출, 비용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재정, 예산, 지출, 비용 등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 용어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및 추계방법과 관련이 있다. 공공복지이든 민간복지이든 모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지출(expenditure)과 비용(cost)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이나 사회복지비용이라는 용어는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모두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재정과 예산이라는 용어는 공공복지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민간복지에 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재정에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의 사회복지 지출과 사회복지 수입을 포함한 개념이다⁴⁾. 그리고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집행되는 재정을 말한다.

4) IMF GFS 기준에 의하면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과 공기업 부문이 있는데 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 부문만 포함된다.

또한 지출(expenditure)과 비용(expense/cost) 개념은 회계학적으로 구분된다. 지출은 현금주의, 비용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출은 재화나 서비스의 획득과 관련되는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며,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지출에는 수입(receipt), 비용에는 수익(revenue) 개념이 대응되어 사용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재정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념 정립을 할 수 있지만 포괄범위와 추계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은 각국의 재정제도 및 사회복지제도의 차이나 연구의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개념상의 정의, 공급주체, 포괄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 흐름을 보면 OECD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작성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경환·계훈방, 1998; 고경환 외, 2002; 박능후, 2002 등).

2.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가. 사회복지재정 범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및 추계방법과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재정의 포괄범위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개념정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또한 어떤 자료원에서 추계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범위가 달라진다.

학자들의 사회복지재정 범위 추계방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지출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예산제도

상에서 직접 추계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은 이해경(2000)의 추계방식을 들 수 있다. 이해경은 사회보장비의 포괄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사업별 지출 합계를 포함하고 퇴직금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비용에서 민간부담분을 제외하고 있다. 노인철·김수봉(1995)의 추계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사회복지재정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괄하는 신국민계정의 일반재정을 포괄하여 추계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의 산출기준을 정해 추계하는 방식이었다.

후자의 예로서 이영환(1995)의 추계방식을 들 수 있다. 그는 사회보장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에 속하는 예산으로서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 예산과 보훈 및 근로자 복지 예산을 합한 것을 추계한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범위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지출을 지방정부 예산구조에서 산출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사회개발비 중 사회보장비를 사회복지지출액으로 산출하고 있다(강운호, 2000; 김태일, 2000). 사회복지지출액으로 사회보장비와 보건위생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김교성·이재완, 2000). 복지 분야 시민단체에서의 사회복지예산 분석의 경우에도 사회보장비와 보건위생을 포함하고 있다(경기복지시민연대, 2005;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2005). 그러나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예산과목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을 갖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학자들의 사회복지재정 추계방법을 보면 아직 사회복지재정 범위에 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합의해가야 할 과제이다. 이 때 국제기구의 추계방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재정 추계방법과 범위

사회복지재정 통계를 생산하는 국제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기구로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사회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용어도 다르고 산출방법 및 범위도 약간씩 다르다. 여기서는 세 기구의 추계방법 및 범위를 검토하기로 한다.

1) ILO의 추계방법과 범위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용어로 사회보장비용(The Cost of Social Security)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비용은 치료나 예방적 의료보호를 위한 급여, 비자발적 수입의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 가족부양에 대한 보조급부가 법률적으로 승인되고 공공 혹은 준공공행정으로 전달되는 계획과 집행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지출로 정의된다(김미혜·정진경, 2003: 7).

ILO의 사회보장비용에는 11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즉, ① 강제적인 사회보험, ②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임의적 사회보험, ③ 무각출 보험제도, ④ 공공기관의 예비적 기금, 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채무, ⑥ 국가법률로 정해진 국가 보건서비스, ⑦ 가족수당, ⑧ 공무원을 위한 특별제도, ⑨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 ⑩ 전쟁 희생자를 위한 지출, ⑪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로 결정된 산업 및 직업제도 등이다. ⑪번 항목은 ILO 추계기준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ILO의 사회보장비용에는 사회복지 관련 정부단위 지출과 사회보험급여가 포함되며,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2) IMF의 추계방법과 범위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재정통계와 관련하여 정부재정통계편람(IMF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1986년 개발하고 2001년 개정판을 내었다. GFS 지침의 주된 목적은 재정정책, 특히 일반정부 부문 또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개념적·회계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결정자와 분석가들이 일반정부 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재정운영·재정상태·유동성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FS 체제에 의해 산출된 자료들은 일반정부 부문 또는 공공부문 전체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 정부의 운영 및 여러 정부계층 간의 거래에 대한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 GFS 체제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정부운영의 특정 영역을 조사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특정 조세, 특정 사회서비스에 수반되는 총비용, 은행부문으로부터의 정부차입액 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될 때 구체적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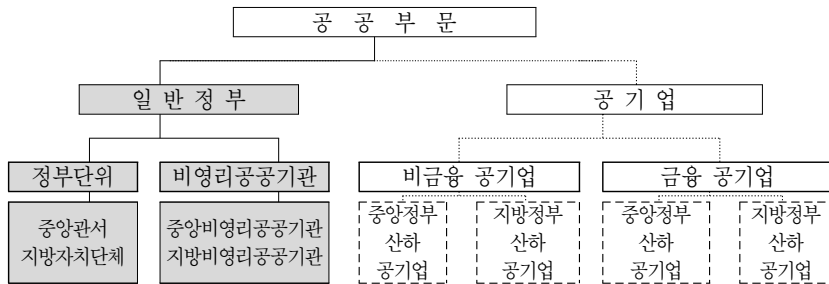
GFS 체제에 의하면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정부기능 분류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호와 보건이라는 항목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항목은 정부재정의 범위와 관련된다. GFS 체제는 일반정부 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과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관한 통계로 구성된다.

일반정부 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단위와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그림 II-1 참조). 국가에 따라서는 사회보장기금을 정부단위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부단위와는 다른 별도의 하위부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회보장기금의 독립적 단위로서의 구분은 사회보장기금이 얼마나 잘 조직화되어 있고 중요도가 높은가, 그리고 이들의 운영이 관련 정부단위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정부재정의

범위는 일반정부 부문에 국한되며, 각국의 재정통계는 일반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하게 된다. 일반정부 부문에는 정부단위와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정부단위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에서 산출된다.

일부 학자들이 일반정부 지출과 사회보험급여를 구분하여 IMF 통계는 일반정부 지출에 국한됨으로써 세 국제기구 중 가장 협소한 범위를 갖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정부 부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함으로써 비롯된 오류이다. 사회보장기금을 정부단위와는 다른 별도의 하위부문으로 분류하더라도 일반정부 부문에는 사회보험급여가 포함된다. 따라서 IMF와 ILO의 통계작성의 범위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IMF 통계의 경우 일부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 일부 국가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국가간 동일 차원의 비교가 곤란하다.

[그림 II-1] IMF의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주: 한 국가의 재정범위는 일반정부 지출을 의미한다.

3) OECD의 추계방법과 범위

사회복지재정에 대해 가장 체계화된 추계방법을 제시한 것은 OECD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이다.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는 사회복지정책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1990년대 초에 개발되었다(OECD, 2007: 5). 이후 지속적인 추계방법의 질적 통제를 통해 OECD 30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의 종합적 측정방법을 발전시켰다⁵⁾. OECD 회원국은 OECD 협정문 제3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의무 중 권고의무로서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OECD는 사회복지지출 개념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개념은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 관련 현물 또는 현금급여(고경환·계훈방, 1998)”라고 정의된다⁶⁾. 이 개념에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사회적 급여인가?⁷⁾, ② 누가 재원을 부담하는가?, ③ 누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가? 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다 ‘건강 및 노동·복지서비스’를 추가한 범위이다(고경환 외, 2003: 39).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는 공공사회

5) 현재 OECD에서는 급여 수혜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6) social expenditure를 ‘사회지출’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OECD에서 정의한 개념은 사회복지보다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심내용이 사회복지에 더 한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회복지지출’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7) 여기서 ‘사회적’ 의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도하여야 한다. (2) 급여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a) 개인간(inter-personal) 재분배나 b) 강제적 참여(compulsory participation)를 포함해야 한다.

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포함한다. 이것은 「정부단위지출 + 사회보험급여 + 법정민간급여」를 의미한다⁸⁾.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 민간부분을 포함한 총괄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의미한다. 여기서 총(gross)의 뜻은 자발적 민간부분을 포함하고 사회보장 수급자가 수령하는 급여액 중 소득세와 소비생활에서 부담하는 간접세 부분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는 정부단위지출, 사회보험급여, 법정 민간부문지출, 자발적 민간부문지출을 포함한다.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보장 수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조세혜택을 추가한 개념이다. 따라서 순사회복지지출이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복지 수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공제하고, 세제혜택은 더하여 얻은 실제의 사회적 급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경제의 생산량 가운데에서 그들이 배분받는 비중으로 볼 수 있다. 추계 목적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돌아가는 몫이 국내총생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런데 OECD의 사회복지지출 범위를 기관을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즉,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의 정부단위 재원, ② 법률로 설립된 사회보험기관의 급여, ③ 민간 지출로서 고용주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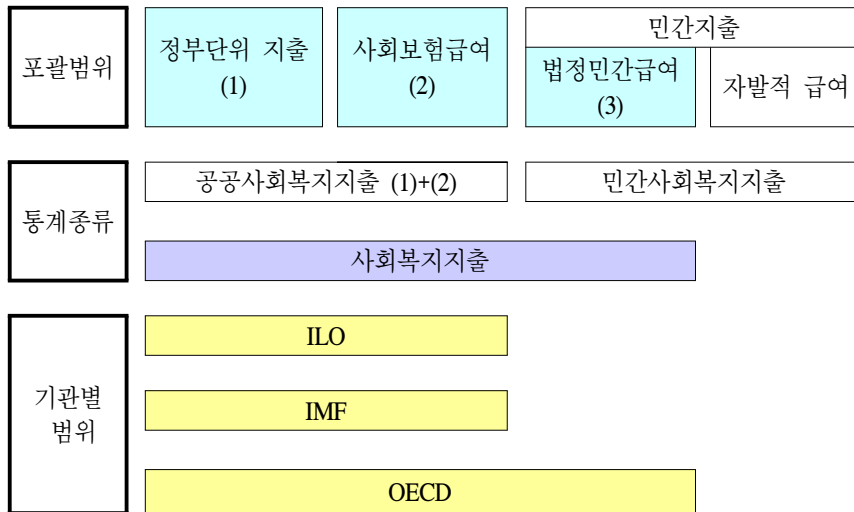
OECD의 추계방법을 보면 현금급여 외에 현물급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액에서 제외한다. 행정비용은 급여 공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수혜자의 등록, 급

8) IMF 재정통계지침에 의하면 일반정부 부문은 정부단위와 사회보험기관 및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정부지출에는 사회보험급여가 포함된다.

여의 관리, 기여금 징수, 통제, 조사, 평가와 재보험 등에 대한 지출액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보건 분야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행정비용은 총액에 포함된다. 이들 비용은 취업 희망자 카운슬링이나 환자의 병원 서비스와 같이 수급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지출(예: 건설비용)은 포함하며, SNA93에 맞추어 발생주의 기준으로 기록한다. 예컨대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의 건설비용이 백만 달러(이자 포함)이고 4년간 건설된다면 매해 투자지출로 25만 달러씩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융자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보호의 전통적 정의에 의하면 자발적인 상호교환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령자가 동일 가치 해당분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계에 준 이자부담 융자는 차입자가 이자 및 원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회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 II-2]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지출 범위의 비교



3. 사회복지모형으로 본 범위

사회복지의 개념적 범위가 정해져야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범위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의 범위를 살펴본다.

한국형 복지모형 정립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복지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논쟁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복지모형에 관한 괄목할만한 연구들⁹⁾이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형 복지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외국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가미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의 연구들은 기존 복지경제적 연구모형을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복지모형 연구범위가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제도에 연계된 일부 고용정책과 경제정책으로 제한된다면, 최근의 복지모형범주는 복지국가를 상정하면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권순원(1994)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경제·사회서비스를, 박천익(2000)은 사회복지모형에서 협의의 사회복지제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정경배(2003)의 사회복지모형은 국가발전모형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그 범주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윤영진 외(2006)

9) 권순원(1994), “한국적 복지의 개념 및 복지모형 정립(I)”;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정경배(1994), “한국형 사회복지모형”; 정경배(1999), “한국형 복지경제 모형과 정책방향”; 박천익(2000), “생산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모형”; 정경배(2003), “복지국가의 생산성 균형 모형” 등이 있다.

는 한국의 사회복지모형을 제안하면서 협의의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여 고용정책과 교육정책까지 포함하지만,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가 모형보다는 그 포괄범위가 좁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개념의 복지모형들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모형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회복지모형의 개념뿐만 아니라 범주까지 고려해보기 위함이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한국형 복지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각 복지 모형의 개념과 한계,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를 살펴보고, 본 고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범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권순원(1994)은 개인들의 경제복지가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경우 사회복지가 증진된다는 전제 아래 제도로써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경제·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한국적 사회복지모형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함께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며, 이에 따르면 정부단위 지출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지출까지 포함하게 된다.

<표 II-1> 권순원의 생산적 복지정책

주요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경제 및 경제외적 복지 증진 · 성장과 복지의 조화
수 단	제도 및 정책개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내실화 · 생활환경의 개량 및 생활기본시설의 질적 향상 · 적극적 소득 및 부의 재분배정책 </div>
재 원 조 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재정의 역할정립 · 민간자원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기업복지제도 ·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효과적 재원분담 </div>
경제·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등 물가의 안정 · 모든 근로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시장참여와 창의력 고취 · 경제적 부조리의 척결 및 공정한 경쟁풍토의 조성을 통한 기회 균등 보장 · 산업평화의 정착과 생활안전대책회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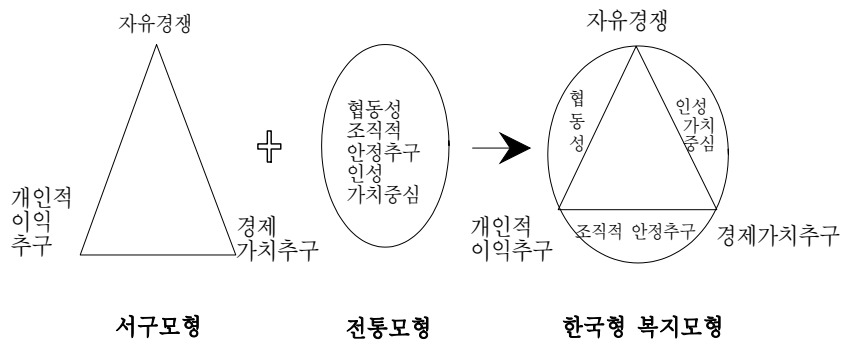
자료: 권순원(1994), 「한국적 사회이념 및 복지모형의 정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

생산적 복지 모형에 따르면 사회보장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회지출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경제적 성장과 복지의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목적적 가치인 복지를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일본의 모형과 지방분권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가진 독일의 모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천익(2000)은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공동체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한국적 전통가치를 바탕으로 서구적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며, 정부와 민간의 절충복지모형을 구

현하는 “공동체적 자본주의 복지 모형”인 것이다(그림 II-3 참조). 즉, 한국의 전통적인 복지모형이 협동성, 조직적 안정추구, 인성가치 중심의 원 모형이라면, 서구의 모형은 자유경쟁, 개인적 이익 추구, 경제가치 중심의 삼각모형이며, 한국형 복지모형은 두 모형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연계복지, 사회안전망(사회보험, 사회복지, 긴급구호) 등의 기초생활안전망에서 보건의료·교육·주택·문화 등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투자, 고용창출 및 생산성 증대 등 고용정책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림 II-3] 박천익(2000)의 한국형 복지모형



자료: 박천익(2000), 「생산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모형」. p. 160.

단순하게 살펴보았을 때 박천익(2000)의 공동체 복지모형은 서구 모형과 전통모형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며,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고, 정부와 민간의 복지 부담을 절충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서구모형과 전통모형이 산술적인 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서구모형과 전통모형이 충

돌하게 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한편 정경배(2003)는 기존의 양극단에 있는 복지국가 모형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복지국가 모형은 기존의 복지국가 모형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비대화되어 관료주의, 비효율성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근로동기 감퇴 및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관대한 급여로 인해 심각한 재정불균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대량실업, 심각한 빈부격차,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정경배는 ‘복지국가의 발전 균형 모형’을 제안했는데,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는 총수요(AD)가 총공급(AS)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모든 부분의 균형을 유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¹⁰⁾. 이를 위해 첫째 기초생활보장, 기초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 정비, 인간개발 등 기초사회안전망을 확고히 하고, 둘째 빈곤탈출 대책, 노인의 생산적 복지, 여성의 생산적 복지, 장애인 재활복지를 통해 자활자립정책으로 근로 동기를 강화하며, 셋째 고용연계망,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방적 건강 투자, 보건복지산업 등 고용창출과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재정 안정, 사회보험 정보체계, 사회보험제도 연계, 전달체계 및 책임 경영 등을 통해

10) 정경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균형적 배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매년 사회복지지출이 당해 연도의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경배, 2003: 42). 연금보험이 재정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다음 세대로부터 차용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세대간 자원배분의 균형이 파괴되어 경제는 점차 침체되고 사회는 쇠락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효율화를 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2>는 복지국가의 생산성 모형에 있어 각각의 하위 목표별 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발전안전망은 빈곤탈출정책으로서 복지수혜자에 기초보장을 제공하고 자활저축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임금 수준이 낮아져서 투자유치가 가능하여 발전의 동력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표 II-2> 정경배의 발전적 균형정책

목 표	발전적 균형정책	= (균형요소)	+ (발전요소)
① 빈곤탈출	사회발전안전망	= 기초보장	+ 생산복지망
② 인력개발	인력개발망	= 기초보장	+ 교육훈련망
③ 투자촉진	재정투융자정책	= 장기재정균형	+ 투자·융자
④ 재정안정	사회보험재정안정장치	= 확정기여	+ 적립금투자
⑤ 고용정책	적극적 고용정책	= 기초보장	+ 취업지원제도

출처: 정경배(2003). 『복지국가의 생산성 균형모형』. p. 46.

정경배(2003)의 논의는 그동안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국가의 성립에 중심축을 이루었던 연구들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성립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극대화하는 모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근로 인센티브와 자활의 지나친 강조로 세대간·세대내 재분배정책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윤영진 외(2006)는 사람·지식 중심의 성장모형과 조화를 이루는 틀 속에서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1) 사회복지(welfare)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safety net)이 구축된 바탕 위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건강복지(healthfare)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와 생산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2) 일자리(job)와 학습(learn), 사회복지(welfare) 3각 구도하에 복지모형의 완결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3) 이러한 구도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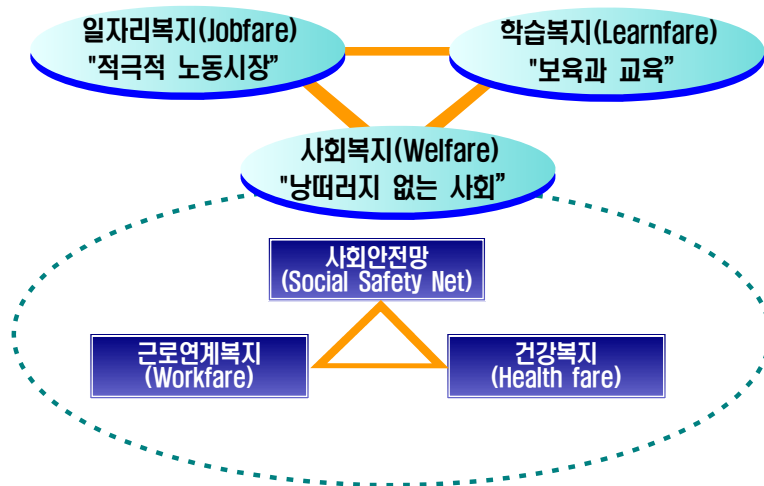
간 중심의 사회투자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미래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한다. 4) 한국형 복지모형의 작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혹은 정부-민간 역할분담으로 추진한다. 5) 한국형 복지모형은 지식·정보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사회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경쟁시스템을 도입¹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향한 사회복지모형의 구도는 2단계 모형으로 구성된다. 1단계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복지·근로·건강” 3자간 조화(welfare triangle)를 통한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건강연계복지(healthfare)’를 포괄하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지향한다. 2단계는 노동력의 재생산 토대를 구축하고(사회복지), 노동의 질적 제고(학습복지)와 노동력 수요공급의 균형(일자리복지)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sustainable welfare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다(그림 II-4 참조).

윤영진 외(2006)는 사회안전망, 근로연계복지, 건강복지의 삼각 편대로 구성된 기존의 사회복지를 일자리 복지, 학습복지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개인 중심의 복지모형 구성으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또한 경제학적 성장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의 경제화 혹은 복지의 생산성을 통한 사회복지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한계를 가진다. 즉, 이러한 복지모형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혹은 ‘근로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에 살고 있는 개인과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다소 간과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복지모형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이 과대 추정되는 오류를 가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 중 교육, 공공행정 일부가 사회복지재정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

11) 시장적 경쟁시스템과 기본원리는 동일하되,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후생(social benefit)을 극대화하는 경쟁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4] 운영진 외(2006)의 한국형 사회복지모형 : '3 fare 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사회복지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 모형은 협의의 개념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즉,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주택 및 지역 개발 정책,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적인 소득보장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천익(2000)의 연구에서는 ‘고용정책’이, 정경배(2003)의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사회투자·적극적 고용정책’이, 운영진 외(2006)의 연구에서는 ‘일자리 복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인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다. 권순원(1994)의 연구에서 효율적인 사회보장 지출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제는 박천익(2000)과 정경배(2003)의 연구에서도 유사하다. 또한 운영진 외(2006)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회복지와 함께 실현해야 할 ‘학습 복지’로 보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지출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권순원(1994)은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고취하고 민간자원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박천익(2000)은 정부와 민간의 절충복지모형을 제안하고, 윤영진 외(2006)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작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혹은 정부-민간 역할분담을 통한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형 사회복지모형과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장하는 관점이나 강조하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복지 모형과 재정 범위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즉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교육정책, 주택과 지역사회개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이들 제도와 정책에 소요되는 지출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지출은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IMF 기준에 따르고자 한다. 사회복지재정의 구체적 범위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 관련 체육, 그리고 (의무)교육까지 설정하여 국가의 재정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 추진전략과 방안

1. 지방자치단체 DB구축환경

가. 사회복지재정지출의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은 국가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고령화 등 취약계층이 증가됨과 함께 늘어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범위와 대상은 다양하고 넓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지출범위에 자치단체별로 복지타운 조성, 사회봉사활동지원, 생활복지·장수마을육성 등 특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어 있음은 이러한 내용의 예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국가재정활동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의 재정활동을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재정활동은 각 중앙 부처가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합(합)이 된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사회복지재정의 총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액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통로로 하여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되어있는 국가주도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원을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계리 상 중복되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순수한 사회복지재정 지출액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재원만큼 차감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국가가 정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은 재원의 이전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업별로 정산을 거친 후 미집행액이나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에 있어서도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중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라 하여도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 재원을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재원이전으로 일부 중복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사회복지재정 지출액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재원을 이전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계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을 시·도비 보조금(광역단체보조금)이라하며, 이는 기초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광역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일부 부담하거나 광역단체의 정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과 같이 시·도비 보조금도 사업별 정산을 거친 후 미 집행액이나 집행 잔액을 광역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재원조달의 원천인 수입 항목은 크게 보아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

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광역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이 있다. 이와 같은 수입항목으로 계획된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외부 자금을 차입한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사회복지 대상 분야의 재정지출 경우에도 재원조달의 방법은 위와 같은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범위와 대상이 다양하고 확대됨에 따라 지출액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재원의 조달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치단체의 자체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원천인 국고보조금(시·도비 보조금도 유사)의 경우 자치단체 간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분야가 전국적인 경우 모든 자치단체는 동일한 기준에 의거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분야는 국고보조금도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자치단체 간 재원의 조달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분야가 일부지역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의 수요보다 부족한 경우 일부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일부 자치단체는 이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자치단체 간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복지대상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보다는 국가에 요청하여 국가 재정지출의 확대를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재정지출의 통로를 의미한다. 재정지출구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세출예산 과목구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세출예산을 기능과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재정지출의 내용을 파악하는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목구조는 2007년까지는 재정지출활동의 기능과 성질에 기초를 둔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과목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행정분야에 재정운영의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의 제고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성과주의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과목구조가 2008년도부터 도입되었다.

품목별 예산과목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출되는 성질 또는 비목의 용도에 따라 계층화하여 분류 운영하는 체계로 세출예산 과목구조라고 말하며, 세출예산을 기능과 성질별에 따라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세분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장·관 분류

세출예산의 “장·관” 분류는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과목구조에 있어 가장 큰 분류로 세출예산이 쓰여 지는 용도를 행정목적의 기능과 연결시켜 분류하는 것이다. 기능별분류 중 “장” 분류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 분류는 장분류를 16개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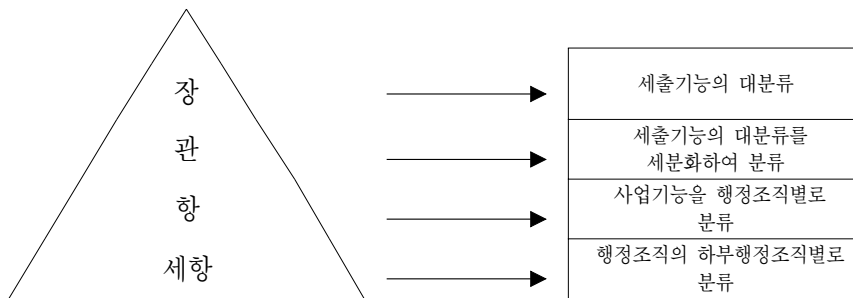
2) 항 분류

세출예산의 “항” 분류는 행정조직별 분류로 주로 자치단체의 “국(局)” 단위를 의미한다. 항 분류를 기능별분류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자치단체의 조직이 업무기능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 분류는 업무기능에 따른 조직별 분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3) 세항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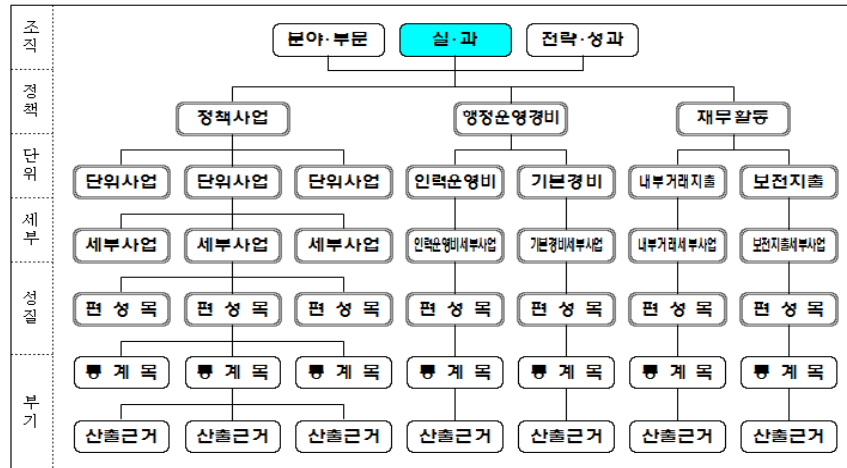
세출예산의 “세항”분류는 항의 행정조직별 분류의 하위단위로 행정조직 중 『과(課) 또는 계(係)』 분류의 성격이다. 이러한 세항 분류의 특성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행정기능 및 자치단체의 조직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품목별 지출예산 과목구조 체계



사업별 예산과목구조는 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 등으로 계층화하여 운영하는 체계이다(그림 III-2참조).

[그림 III-2] 사업별 예산구조



다. 품목별 재정구조와 사업별 재정구조의 관계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은 재정투자를 통해 실현된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역사적 통계자료를 현재 및 미래와 접목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현재에는 정책의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미래에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는 과거의 사회복지투자 성과를 정보자료로 보관 관리하고 이들 정보를 과거와 현재 및 미래로 연계해나가는 계속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예산과목구조)가 2008년을 기점으로 품목별구조에서 사업별구조로 변화는 DB구축사업의 새로운 과제가 된다. DB구축사업이 시계열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능을 비교 가능한 세부차원까지 분석하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복지재정 DB는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투자지출 규모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품목별 재정구조와 2008년도 사업별 재정구조에 대한 연계와 비교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즉 예산을 관리하는 관점과 중심이 품목에서 사업으로 변화되어 2007년도 이전과 2008년도 이후의 지출내용을 서로 시계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DB구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품목별예산은 예산편성의 추구하는 목적이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예산이 성질(ex. 인건비, 경상비, 여비,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사업별 예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예산이 쓰여 지는 사업(ex. 도로개설사업, 사회복지관 건설사업, 상수도관 개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품목별·사업별 예산제도를 요약하면 <표 III-1> 과 같다.

〈표 III-1〉 품목별·사업별 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품목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
편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목 위주 편성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목표, 계획, 예산 연계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중심으로 편성 -중장기 목표에 입각, 계획서와 예산(안) 동시 작성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예산서 형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예산서 -품목별 편성 ■ 목별 사업예산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중심 예산서 -사업단위 편성 ■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예 산 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위주 예산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위주 예산운용
결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품목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사업단위 결산
심 사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환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장치가 없어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주민에 대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중심의 편제로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 ■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은 재정구조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DB구축의 체계와 범위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우선 재정구조의 체계면에서 품목별 구조는 조직별, 사업별(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그리고 성질별(편성목)로 되어있다.

- 조직별 분류: 재정지출의 효과를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기 위한 조직(통상 실·과)에 두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이 어느 조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 사업별 분류: 재정지출의 효과가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의 어느 업무에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로 사업을 동일 실·과 내에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 간 책임의 범위와

내용 등을 측정·결정하는 구조.

- 성질별(편성목) 분류: 재정지출의 내용이 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성질 중 어느 성질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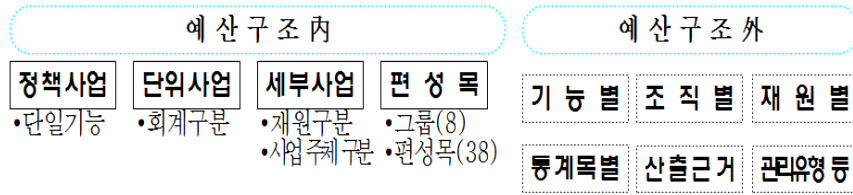
[그림 III-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재정구조 체계

예산구조외	예산구조내				
회계별	기능별	조직별	경비유형	성질/품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5) •관(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자율) •세항(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세항 (대4/소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38) •세목(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기초 (비구조화)

재정구조의 체계 면에서 사업별 구조는 기능별, 조직별, 경비유형별, 성질(품목)별, 그리고 사업별의 순서로 되어 있다.

- 기능별 분류: 재정지출의 효과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의 기능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 조직별 분류: 재정지출의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조직이 자치단체의 조직 중 어느 조직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 성질별(품목별) 분류: 재정지출의 내용이 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성질 중 어느 성질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 사업별 분류: 재정지출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영역중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그림 III-4] 사업별 예산제도 재정구조 체계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재정구조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재정구조 사이에는 서로 접근방향이 다르면서도 재정구조체계 속에서 볼 때 조직별의 분류체계 속에 2007년도 이전은 항과 세항이 포함되어 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사업(정책·단위·세부)이 포함되어 있어 2007년도 이전의 조직별에 체계와 2008년도 이후의 사업별 체계를 연결시키면 품목별 재정구조와 사업별 재정구조가 상호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III-5 참조).

[그림 III-5] 품목별·사업별 재정구조의 체계비교

분 류	2007이전	2008이후
기능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장 (5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관 (16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분 야 (13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부 문 (51개)</div>
조직별 (사업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항 (자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세 항 (자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정 책 사 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단 위 사 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세 부 사 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행정 운영 경비 · 재무 활동 </div>
성질별 (경비 유형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세세항 (대 4개 / 소 8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목 (8그룹, 38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세 목 (109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편성목 (8그룹, 38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통계목 (129개)</div>
(부 기)	(산출기초)	(산출기초)

2. DB구축의 추진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통계는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중 결산통계는 『재정연감』으로, 예산통계는 『예산개요』로 행정안전부가 공표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관련된 세부자료는 개별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또는 재정공시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고 공개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이를 DB구축의 자료로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각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어 지출범위가 넓고 내용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별 사업이 다양하고 재정지출구조가 비정형화된 상태에서 전 자치단체(250개)의 재정을 공통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DB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의 추진 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DB는 개별자치단체별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지역 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간 사회복지수준의 향상과 균형적 발전 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DB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재정투자의 시계열적 추이분석 또는 다른 변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활용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재정DB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원화된 사회복지업무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DB의 역할은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업무간 연계성을 파악하는 도구 역할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정보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복지재정 DB구축은 사회복지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미래의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데 방향 제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복지재정DB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검색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DB의 관리와 Up date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내용과 범위도 다양하여 중앙정부가 수행하지 않는 기능과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구조가 중앙정부에 비해 재원, 사업, 그리고 회계 등이 복잡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부문의 복지재정DB는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구조와 연계시켜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통합 시 국가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재원(국고보조금)은 이중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발생한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한 재원(시·도비 보조금)이 이중계산이 되기 쉽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시도-시군구) 외부거래, 지방자치단체내의 회계 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의 중복 계상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것을 총계규모라고 하고 중복 계상분을 공제한 것을 순계규모라 한다. 총계규모는 개별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순계규모는 전국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파악 시 활용된다(표 III-2 참조).

54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표 III-2〉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의 계산방식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국가의 재정지출(A)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출(B)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수입(C)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D)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E)	시·군·구보조금 지출(F)	
	시·도비보조금 수입(G)	기초자치단체지출(H)

3) 계산방식

- 가) 국가의 사회복지재정지출 규모: $A+B$
-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 규모: $C+D$
- 다)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 총계 규모: $A+B+C+D$
- 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 순계 규모: $A+C+D$
- 마)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지출 규모: $E+F$
- 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지출 규모: $G+H$
- 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 총계 규모:
 $E+F+G+H$
- 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 순계 규모:
 $C+D=E+G+H$

위의 계산방식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재정지출규모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국가 및 개별지방자치단체의 지출규모는 당해 기관 및 단체의 총 지출금액이 사회복지 재정지출규모가 되므로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상호 주고받는 재정을 차감한 순계방식이 실제의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 규모를 전부 합산하는 경우가 총계규모가 되고 여기에 국가의 사회복지재정 지출금액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 총계규모가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계산을 차감할 수 없어 총계규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3. DB구축의 추진단계

시스템구축의 단계는 크게 자료구축단계와 자료이용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준비단계, 구축단계, 검증단계, 그리고 이용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표 III-3〉 DB구축의 단계

자료 구축단계		자료 이용단계	
준비설계단계	정보입력/시스템구축 단계	시스템 검증 및 이용여건 확충단계	정보이용 정착단계
-구축계획의 수립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구축범위의 설정 •기존시스템과 차별성 -이용대상자의 요구사항 반영 -참여인력의 구성 및 확보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강구	-기초자료 수집 -자료의 세부분류 (기능별, 회계별 등) -자료의 표준화 •품목 및 사업예산과 연계성 •향후 중앙재정과 연계성 확보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한 분석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시스템의 구조 및 성능 검증 -자료의 통합화 및 검색 편의성 확인 -자료의 사회공동 이용을 위한 공개프로그램 개발	-구축 자료의 신뢰성 검증(감리기관 선정) -시스템의 관리체계 마련 -부처, 조직 간 공동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위원회 구성) -데이터의 지속적인 구축

가. 준비설계 단계

1) 구축계획의 수립

구축계획의 수립은 DB구축의 준비설계의 첫 단계로 이에는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과 구축범위의 설정, 기존시스템과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단계별 사업추진방안은 DB구축의 계획수립에서부터 구축된 정보의 이용까지 제반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으로 1차 연도에는 복지재정의 이론적 정리(개념, 범위 등),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2차 연도에는 지방정부 품목예산의 DB방안과 아울러 사업예산제도와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3차 연도에는 국가 사회재정의 연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차 연도에는 사회재정 투자의 공개Program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5차 연도에는 사업완성을 위한 제반 미비점 보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나) 구축범위의 설정

구축범위의 설정은 사회복지재정 Data Base구축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지방교육 포함)정부에 국한하며 회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포함 한다.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사회복지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범위에 대해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한국형 사회복지

지모형과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장하는 관점이나 강조하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복지 모형과 재정 범위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교육정책, 주택과 지역사회개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이들 제도와 정책에 소요되는 지출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 지출은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IMF 기준에 따르고자 한다. 사회복지재정의 구체적 범위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주택, 청소년 관련 체육, 그리고 (의무)교육까지 설정하여 국가의 재정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다)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은 기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등은 지방재정을 전반적으로 수록하면서 2008년도 이후부터 기능별 분류로 변경하고 있다. 기존시스템은 품목별예산제도를 유지해 온 그 이전연도와 연계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e-호조를 통해 사회복지재정투자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사회복지재정DB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 간 및 일반정부간(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Tool'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계성 있는 Tool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간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구축
- 또한 지방정부가 앞으로 중앙정부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연계성 분석

이 가능하도록 자료구축

- 세부 기능별 분류를 지방정부 전체 뿐 만 아니라 234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파악 가능하도록 자료구축.
- 지방정부의 특성변수와 연계하여 분석하도록 자료구축. 예로, 전체지역주민 수(신생아, 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인구수, 장애인구수, 세입예산규모(자체수입, 자주재원),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등.
- 이들의 구축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재정과 특성변수 간의 추이분석, 상관성 등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재정 투자의 성과제고, 자치단체 간 비교를 통한 복지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할 것임.

2) 이용대상자의 요구사항 반영

본 시스템의 주 이용자는 정책결정 공무원과 정책분야의 연구자, 학계, 국회 등으로 이들의 요구를 사전에 고려하여 자료구축에 참고한다.

〈표 III-4〉 이용대상자별 시스템 요구사항

이용대상자	요 구 사 항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재정의 통계적 기능시스템 요구 - 통계검색의 용이성 - 정책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객관적 성과평가 준거자료 제공
학계·연구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종합적인 투자재원 제공(접근) - 세분화된 사업별 자료요구 - 분석에 필요한 관련 통계의 제공 - 통계출처 및 이용상 한계제시(각주)
국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정지출에 대한 종합현황 제공 -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국가의 사회복지활동 성과 등 제공 - 기대효과 중심의 시스템 구축

3) 참여인력의 구성 및 확보

DB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술분야, 재정운영, 정보기술의 적용, 정보자료의 분석 및 정책 결정 반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의 종합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스템 구축관리 전담반 운영이 필요하다.

〈표 III-5〉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인력

대상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역할	소요 인력
학술연구	사회복지 제도 운영	구축대상 범위 검토	학술 전문가 2명
재정운영	사회복지 재정투자사업 관리	재정투자사업의 구축 방안 수립	지방예산 관계자 1명 국가예산 관계자 1명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및 관리	DB구축방법, 시스템 관리기술 수립	정보처리기술사 1명
정보분석	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	구축자료의 분석기법	통계전문가 1명
의사결정	시스템 분석의 종합관리	의사결정의 유용성 검토	중간 관리자 1명

〈표 III-5〉에 언급한 소요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DB구축과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강구

소요재원은 DB구축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센터의 일반사업예산으로 수행한다.

나. 정보입력/시스템구축 단계

1) 기초자료 수집

기초자료 수집은 DB구축의 대상이 되는 정부와 전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과 관련된 원시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DB구축의 성공요인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기초자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발간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재정연감, 개별자치단체에서 발간한 통계자료, 재정공시내용 등)이다.

2) 자료의 세부분류

기초자료의 분류는 <표 III-11>의 DB구축의 관리체계에 의거 상위 분류로 기본구조를, 기본구조 밑에 기능구조를, 기능구조 아래 세부기능구조를 두고 있다. 기본구조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복지, 그리고 주택복지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기능구조는 기본구조의 4가지 분류를 사업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화한다.

- 사회복지의 기능구조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으로 구성한다.
- 보건의료의 기능구조는 보건의료, 예방위생관리로 구조화한다.
- 교육복지의 기능구조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으로 구조화 한다
- 주택복지의 기능구조는 서민임대주택건설, 서민임대주택관리로 구조화한다.

나아가 이렇게 기본구조 및 기능구조화된 구축자료를 필요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세분기능구조로 분류하였다. 세부기능 구조는 기능구조에 속한 사업을 유사성 있는 사업끼리 세분화하여 묶어가는 분류작업으로 DB구축사업이 진척되면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DB구축의 기본구조와 기능구조 단위에서 재원별(국비, 지방비 등), 회계별(일반, 특별회계), 사업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자료의 표준화

자료의 표준화는 DB구축과정에서 동질의 자료가 동일한 체계와 방법으로 구축 및 검색되어질 수 있도록 정보입력 및 시스템구축단계에서 표준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료의 표준화는 국가전체의 통합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DB구축자료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자료의 세부분류에 있어 동일한 체계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한 분석

자료의 검증은 정보입력 및 시스템구축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구축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다. 특히 본 DB구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축 대상의 수가 많고 구축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축자료의 체계적인 검증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구축자료의 검증방법은 중앙정부 및 개별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단계에서부터 검증하여 자료의 수치상 오류 등을 파악하고, 정보 검색단계에서는 입력의 정확성, 연도 간의 수치상 불합리성, 정보의 논리적 모순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검증 및 이용여건 확충단계

1) 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지정

DB가 구축되면 구축자료의 검색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관리책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스템 운영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시스템 작동의 신속성, 구조의 안정성, 이용의 편의성 등 주로 시스템의 운영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입력된 자료의 정확성 및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Up-Date해주는 자료관리 측면이다.

따라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운영 측면의 경우 시스템 개발 시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조건가운데 운영되도록 하면서 운영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유지보수토록 제도화하고 자료 관리의 측면에서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을 책임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2) 시스템의 구조 및 성능 검증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시스템의 구조 및 성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와 성능의 검증 시 구축계획에 명시된 제반내용이 모두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축하고자 하는 자료가 구조적으로 기본구조, 기능구조, 세부기능구조로 체계화되어 있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및 구축된 자료 간에 비율의 산출 등 기본통계를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 및 성능의 검증은 시스템 구축의 기술적인 사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동 분야에 전문성 있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리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자료의 통합화 및 검색 편의성 확인

시스템이 구조와 성능이 우수 하여도 구축된 자료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 Tool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용 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이용의 주요 기대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사용의 검색조건 등에 대한 시연 등을 거쳐 자료의 통합적인 이용과 검색의 편의성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4) 자료의 사회공동 이용을 위한 공개프로그램 개발

DB내용 중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회 공동의 요구정보를 적극 알리는 차원에서 DB시스템과 별도로 공개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개프로그램의 구축은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고객을 위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DB구축이 진행되어 자료의 축적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사회 공동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특화 및 관리 분석하여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정보이용 정착단계

1) 구축 자료의 신뢰성 검증

정보이용 정착단계에서는 구축자료의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구축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단순한 숫자상의 오류 뿐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 및 성능 등을 포괄하고 있어 시스템 전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신뢰성 검증은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 감리의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시스템의 관리체계 마련

시스템관리자는 구축된 DB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운영 측면과 자료관리 측면이 연계되어 주기적으로 시스템의 점검, 자료의 Up-Date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시스템 운영상 바이러스의 감염, 해킹 등에 따른 시스템의 방어적 관리에도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의 관리 체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부처, 조직 간 공동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사회복지재정DB는 정부 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그리고 여성부 등 여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재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의 기능과 역할, 지출된 사업비 등과 연계하여 상호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적인 체계로 되어 있다.

나아가 구축된 자료의 정확성의 확보와 구축정보의 이용에 따른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DB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DB구축관리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데이터의 지속적인 구축

정보이용 정착단계에서 시스템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처·조직이 참여하는 DB구축관리위원회(가칭)가 구성되면 시스템운영의 내·외부적인 제반 여건이 구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관리의 환경조건이 마련됨과 함께 재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함으로 정보이용이 한층 정착될 것이다.

4. 효율적인 DB구축방안

가. 구축 대상기관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의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처는 모두 대상이 된다. 이는 제2장에서 설정한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한 전 행정부처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출 전체를 구축대상으로 하며, 구축단체의 범위는 234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하였다. 자치단체간 재정 흐름의 이중계산 차감 등의 한계로 광역자치단체는 제외하였다.

〈표 III-6〉 지방자치단체 DB구축 범위

구분	단체별	기관수	비고
개별행정단위	계	250	단체별로 구축 (광역단체산하 기초단체 미포함)
	광역자치단체(시·도)	16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34	
광역행정단위	산하기초단체를 포함한 광역단체	16	권역별로구축 (광역단체산하 기초자치단체 포함)

나. 구축대상 범위

DB구축의 대상범위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출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격으로 보아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경비지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광의 개념의 사회복지 재정지출로 접근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지출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III-7 참조).

<표 III-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유형

구 분	지 출 유 형	지 출 내 용	
사회복지 (보건 복지 가족부)	건강 의료	건강 관리	건강검진, 건강관리, 방문보건관리, 보건건강관리,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및지료소운영, 의료원운영, 가정간호, 가족보건, 건강간호관리
		위생 방역	공중위생, 방역관리, 보건위생, 예방의약, 위생관리, 환경위생, 환경위생관리,
		의약 관리	식품의약, 약물관리, 예방의약, 의약관리, 예방의약사업
		의료 보장	의료급여, 의료급여기금관리,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사회 보장	사회 복지	보서관리, 복지시설관리, 복지조사, 복지타운조성및관리, 복지행정, 복지행정관리, 복지회관운영, 부랑인보호, 사회복지관리, 사회복지관운영, 장수마을, 종합복지관운영
		노인	노인관리, 노인복지, 노인복지관운영, 노인시설운영, 노인재활복지, 경로당설치, 경로당운영,
		장애인	장애복지,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장애인관리, 장애인및아동복지, 재활복지
		가정	가정복지, 보육, 저출산대책
		아동 청소년 여성	가정·아동복지, 보육관리, 보육및아동지원, 아동및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장묘	공설묘지, 묘역관리, 묘지관리, 장묘관리, 장묘문화, 장묘센터관리, 장묘시설운영, 장수복지, 화장장관리
		기초 생활 보장	기초생활,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호, 사회복지관리, 생계보호, 생활보호
		저소득 지원	소모주민생활편익증진, 소득지원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 저소득주민보호, 저소득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고용	자활고용, 고용, 자활, 자활지원
		기타	주거복지, 마을회관건립,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센터운영

〈표 III-7〉 계속

구 분	경비지출 유형	경비지출 내용
사회복지 (기타 중앙부처)	교육복지	장학금관리, 학교급식지원, 도서관운영, 전문대학운영, 교육문화센터운영, 사회교육·평생학습, 문화정보관운영, 수련관운영, 청소년문화상당실,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여행의집관리사무소운영,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지도
	근로복지	고용지원,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 근로지원, 노동정책, 노사지원, 노사협력, 노정관리, 노정관리사업, 노정행정, 실업대책, 실업대책관리, 실업대책반운영, 실업안정,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주택복지	임대주택관리, 저소득임대료지원
	보훈복지	거창사건지원, 보훈시설관리
	여성복지	부녀복지, 부녀복지사업, 양성평등, 여성교육,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 여성문화센터운영, 여성발전기금운영, 여성발전센터운영, 여성보육, 여성복지관건립, 여성정책관리, 여성정책위원회운영, 여성청소년정책관리, 여성회관문화교육센터운영, 여성회관운영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통합DB구축사업 표준세출분류, 2007.

〈표 III-7〉 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한 자치단체의 조직별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DB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2007년까지 품목별 재정구조에서는 사업별로 분화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출 내용을 파악하는데 구조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표 III-8〉 과 같이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장”의 사회개발비에 속하며, 그 하위에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4개의 “관”분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들 4개의 ‘관’에 속한 경비가 모두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 범위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표 III-8〉 2007년도 이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구조

장	관	항 및 세항
1000 일반행정비	1100 입법및 선거관리 1200 일반행정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2000 사회개발비	2100 교육및문화비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300 사회보장비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3200 지역경제 개발비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400 교통관리비	
4000 민방위비	4100 민방위관리비 4200 소방관리비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5100 지방채상환 5200 제지출금 5300 교부금 5400 예비비	

한편 2008년도 이후 사업별 재정구조에서는 2007년도 이전의 품목별재정구조가 전면 개편되어 장·관 체제에서 사업유형별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다(표 III-9 참조). 즉 종전의 ‘관’단위의 분류영역은 비슷하지만 각 분야별 세부 분류가 새로 제시되어 있다.

〈표 III-9〉 2008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구조

분야	부 문
총 계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분야	부 문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품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

70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품목별 재정구조와 사업별 재정구조를 대비하여 보면 <표 III-10> 과 같다.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DB구축은 품목별 재정구조와 사업별 재정구조의 내용이 상호 시계열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계성 파악이 기본이다.

<표 III-10> 품목별 재정구조와 사업별 재정구조의 비교

2007년도 이전 (품목별 재정구조)		2008년도 이후 (사업별 재정구조)	
장	관	분야	부 문
총 계		총 계	
1000	일반행정비	010	일반공공행정
	1100 입법및선거관계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1200 일반행정비		
4000	민방위비	020	공공질서 및 안전
	4100 민방위관리비		023 경찰 024 재난방재·민방위
	4200 소방관리비		
2000	사회개발비	050	교육
	2100 교육및문화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2300 사회보장비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교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088 주택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2 식품의약품안전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표 III-10> 계속

2007년도 이전 (품목별 재정구조)		2008년도 이후 (사업별 재정구조)	
장	관	분야	부 문
3000	경제개발비	100	농림해양수산
	3100 농수산물개발비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3200 지역경제개발비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3400 교통관리비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2 도시철도 123 해운·항만 124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
		900	기타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의 범위는 현행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건의료, 사회보장, 교육복지, 근로복지, 주택복지, 보훈복지, 여성복지의 경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07년도 이전의 품목별구조와 2008년도 이후의 사업별구조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008년 이후 예산구조가 사업별 구조로 변경되어 사회복지재정구조가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지출 DB가 수용할 수 있는 체제

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DB구축범위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주택으로 분류하여 이를 기본구조로 하고 기본구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기능구조를 설정하고, 기능구조 이하의 구조는 DB구축사업이 진행·정착되면서 확장해 나가는 세부기능구조로 관리하는 것이 DB구축의 체계상 합리적이라 생각한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사회복지재정지출 DB구축의 관리체계

단계별 구조	구조 내용	개 념
기본구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복지, 주택복지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있어 세대간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체계로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부처 간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분류
기능구조	기본구조를 사업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구조설정	기본구조 내에서 기능별로 유사성이 있는 사업을 묶은 것으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업별 분류의 성격
세부기능구조	기능구조에 속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분류 구조	기능구조 내에서 유사성이 있는 사업을 세분화하여 묶은 것으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최하위 분류임, 사회복지 재정지출DB구축의 초기에는 사용될 수 없으나 DB구축내용이 정착되면서 활용가능

DB구축체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DB구축의 범위를 기본구조, 기능구조, 세부기능구조로 계층화할 경우 기본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분류가 되며, 기능구조는 2007년도 이전까지 품목별 재정구조에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재정구조로 변화한 자치단체의 사업별 분류를 대상으로 하여 DB를 구축 하고, 세부기능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구조에 의해 분류된 하위구조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DB구축의 기본구조·기능구조·세부기능구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 기본구조·기능구조·세부기능구조와의 관계

기본구조	기능구조	세부기능구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재정지출 중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가장 큰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DB구축에 부응하면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사업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중앙정부의 사업별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지출의 DB구축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구조의 하위사업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능구조단계에서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사업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구조의 하위구조와 연계될 세부기능구조는 차기년도의 중앙정부 DB구축방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체계

기본구조	기능구조	세부기능구조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맞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중앙정부의 사업별 예산구조가 확정된 이후 검토반영
보건의료	보건의료 예방위생관리	
교육복지	유아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주택복지	서민 임대주택건축관리	

다. 구축대상기간의 소급범위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의 적용시점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의 문제는 DB의 시계열분석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DB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의 연도가 길면 길수록 역사적인 가치도 높고 자료 분석의 방법과 내용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DB의 구축사업이 사업의 시작 시점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과거의 기록을 DB로 구축하기 때문에 자료의 멸실,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축 대상자료 간 연계성의 상실, 현시점에서 과거자료 활용에 있어 효율성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DB구축에 따른 노력과 투입된 비용의 가치보다 이용의 효과는 낮아지기도 한다. 또한 계획기간의 운영에 있어 통상적으로 장기계획은 5년 정도 중기계획은 3년 정도의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DB의 구축에 있어서도 구축된 자료의 분석이 지나치게 장기간을 분석 범위로 하는 경우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DB구축에 따른 소급범위의 적용은 구축대상 자료의 역사적 가치보다는 활용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DB구축 당시의 여건과 환경이 유사한 시기의 탐색과 DB구축에 따른 투입비용보다 이용의 효과가 높은 시기를 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와 여건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7년도 이전까지는 품목별 재정구조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와 지방재정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재정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왔다. 그러나 2008년에는 종전의 품목별 재정구조가 사업별 재정구조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변화의 와중에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내용이 품목별구조와 사업별구조로 서로 다른 체계 속에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DB구축의 소급시점은 <표 III-14> 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시점 이후, IMF구제금융 이후, 밀레니엄시대가 전개된 2000년 이후, 사업별 예산구조 시행 5년 소급, 그리고 사업별 예산구조 시행 이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II-14> DB구축시점 선정유형

- 1)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1991년부터 소급구축 방안
- 2) 국가 및 지방재정에 위기로래로 IMF구제금융이 초래된 1997년부터 소급 적용
- 3) 새로운 밀레니엄시대가 전개된 2000년부터 소급적용
- 4) 사업별 예산구조가 시작된 2008년부터 5년을 소급한 2004년부터 적용
- 5) 사업별 예산구조가 시작된 2008년부터 적용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지출 DB구축 소급시점적용방안에 있어 장단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5> DB구축 소급시점 적용방안 비교

적용방안	장 점	단 점
1991년부터	DB구축방안 중 소급시점이 가장 길어 역사적인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	현재의 사회복지 재정지출과의 비교분석에 있어 시대적 괴리감 발생
1997년부터	국가의 위기상황이 반영되어 있어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분석에 유용	재정위기상황은 특수한 재정환경에서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성이 결여됨
2000년부터	21세기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동질감이 형성되고, 비교적 장기적시 계열분석에 적합	재정지출제도 변화 등 특별한 고려 없이 단순히 연대적 관점에서 소급시점을 정한 작위적인 결정의 비판 소지

적용방안	장 점	단 점
2004년부터	비교적 최근의 사회복지재정지출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축기간이 짧아 적은비용으로 효과적인 분석결과의 도출가능	구축기간이 5년 정도에 불과하여 DB구축자료의 역사적인 의미가 크지 않고, 자료분석의 효과가 제한적임
2008년부터	사업별 재정구조의 개편과 함께 DB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구축내용을 사업별구조와 체계적으로 일치 시킬 수 있음	과거의 구축자료가 없어 DB로서의 가치를 기대할 수 없음

위에서와 같이 소급시점에 대한 적용방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선택 가능한 대안은 200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부 기능별 기초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네 번째 유형인 2004년 이후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라. DB구축자료의 적용방법

1) 총계와 순계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적용에 있어 자치단체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 재정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독자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반면, 자치단체를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행정권역적 개념 또는 전국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 개별 자치단체의 독립성보다는 통합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본 DB구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개별 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일정한 지역의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광역행정단위의 관점에서, 그리고 모든 자치단체를 통합한 전국자치단체의 3가지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금액을 파악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계의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총계의 개념이다. 총계규모는 지방자치단체 간(시도-시군구) 외부거래, 지방자치단체내의 회계 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의 중복 계상 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것을, 반면에 중복 계상 분을 공제한 것을 순계규모라 한다. 총계규모는 개별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순계규모는 전국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파악 시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지출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총계를 활용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있고,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있어 회계 간 중복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총계 개념을 사용하여 DB를 구축하면서 개별 자치단체 내에 순계개념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총계대신 순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순계방식의 접근은 개별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지출이 내부적인 관계로 귀착되지만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재정지출은 외부적인 관계로 귀착되어 재원의 소유와 지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순계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DB구축에 있어 예산과 결산의 적용 기준

예산은 한 해 동안 재정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재정구조에 맞춰 배분한 자금의 배분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은 자금의 집행을 통해 수립된 계획이 달성되게 된다. 반면 결산은 자금의 배분계획서인 예산을 집행하고 난 결과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지출하고 남은금액, 지출의 성과, 남은 금액의 사용계획 등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예산과 결산의 개념상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대상은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결산의 개념 속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뿐만 아니라 과거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명시이월

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고 자치단체 간 순계처리도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의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본 DB구축에서는 지출금액은 예산과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므로 최종 예산금액을 DB구축의 대상으로 적용해야한다.

3) 총계와 순계, 예산과 결산의 적용기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에 있어 회계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를 포함하며 DB구축 대상이 개별 자치단체인 경우 총계개념을 적용하고 광역행정권 또는 전국권의 자치단체를 구축대상으로 할 때 순계개념을 적용한다. 아울러 DB구축에 적용된 사회복지재정은 결산에서 도출된 금액과 예산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표 III-16〉 순계와 총계, 예산과 결산의 적용 기준

적용구분	순계·총계	예산·결산	회 계
개별자치단체대상 DB구축	총 계	최종 예산 결 산	일반·특별· 기금회계 포함
광역자치단체대상 DB구축(광역단체내의 기초단체인 시·군·구 포함)	순 계 (자치단체간 중복공제)	최종 예산	
전국자치단체대상 DB구축(광역과 기초단체 포함)	순 계 (자치단체간 중복공제)	최종 예산	

마. DB구축자료의 확보방법

1) 재정지출자료의 공급원

사회복지 재정지출 DB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DB구축의 소급시점을 2000년부터 적용할 경우 2007년도 이전부터 2000년까지 8개년도의 자료는 과거의 통계기록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재정연감과 예산개요 2종이 매년마다 발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자료도 재정연감과 예산개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DB의 구축내용이 재정연감이나 예산개요를 통해 세부 기능별 기초자료를 수집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08년 이후 지방재정구조가 사업별 구조로 변화되고, 재정의 운영시스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회복지 재정지출 DB의 기초자료도 e-호조와 연계하여 DB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은 e-호조가 완성되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대한 DB구축자료에 대한 검증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에 있어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재정연감과 예산개요 그리고 e-호조가 DB구축자료의 주 공급원이며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구축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재정연감, 예산개요, e-호조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필요 하다. 또한 DB구축과정에서 기 발간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구축자

료의 검색, 미흡한 자료의 보완, DB구축사업에 관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바. DB구축대상의 표준화

1) 표준화의 의의

2000년 이후의 자료를 DB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축대상 자료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료의 표준화는 구축대상 범위와 체계가 동일기준에 의거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준화된 구축대상 범위와 체계, 그리고 구축서식이 표준화된 경우 자료의 입력작업을 오류 없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

2) DB구축서식의 표준화

DB구축의 대상을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기본구조와 기능구조의 서식을 표준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지출 DB구축 양식

구분		구축대상자료							
일반 사항	지방자치단체명	○○시·도(○○시·군·구)					코드 번호		
	연도	○○○○년도			자료구분	()개별단체 ()통합단체			
기본 통계	인구 수	남	○명	65세 이상	주민 소득		도시 인구		
		여	○명	18세 미만			농촌 인구		
	가구 수	○가구	공공부조대 상자 수	○○가구 ○○명	장애인 수	○○명			
	연간지방세수입액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수	
사회 복지 재정 지출	기능구조		재원 별 ¹⁾		회계 별 ²⁾		사업 별 ³⁾		
	계								
	사회복지 :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 소계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교육 : 소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주택 : 소계								
	서민임대주택건설 서민임대주택관리								

주: 1)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2) 일반, 특별, 기금
 3)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

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 강구

사회복지 재정지출 DB구축은 국가전체의 사회복지의 확충과 사회복지의 균점 등 정책의사 결정에 긴요하게 쓰여 질 수 있는 정보인프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관한 자료의 공유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등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매우 유용한 정보시스템이 된다. 특히 본 DB 구축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업무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유용성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 유지가 필요하다.

아. 사회복지 재정지출 DB공개시스템 운영

1) DB시스템과 공개와의 관계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자료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DB구축의 성공여부는 DB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여기서 DB의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DB를 직접 이용하는 집단으로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학계·연구계의 종사자들이 학술연구, 사회복지제도 정책의 분석, 정책건의 등의 목적으로 DB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지출 DB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려는 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학계, 연구계 및 국민들이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은 구축된 DB자료를 직접 검색하여 충족해 나가도록 운영하는 것보다는 DB로 구축된 원시자료를 체계적

이고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 등에 대한 사회복지재정의 정보제공은 DB구축자료의 원시자료의 검색방식보다는 DB구축자료를 일정한 체계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재정 현황과 실태 등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공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2) 사회복지 재정지출 DB의 공개방안

사회복지 재정지출 DB를 공개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B 구축자료를 원시 자료로 하여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공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DB공개の内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국가전체적인 사항,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

둘째,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자료를 여러 가지변수를 통하여 지수화 내지 통계처리 절차를 거쳐 가공하여 사회복지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현황과약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

셋째, 지역별·자치단체별 사회복지재정의 여건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넷째, 공개하고자 하는 자료의 접속에 있어 검색의 편의성 유지.

이러한 사회복지 재정지출 DB의 공개에 있어 국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재정지출 DB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복지재정 DB구축과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Data Base구축은 2004년 및 2005년의 예산총계 및 결산총계에 대해 실시하였다. 또한 회계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까지로 하였다. 그 이후 연도의 DB구축은 앞의 2개 년도에 대한 자료가 완료된 후 차기 연구에서 착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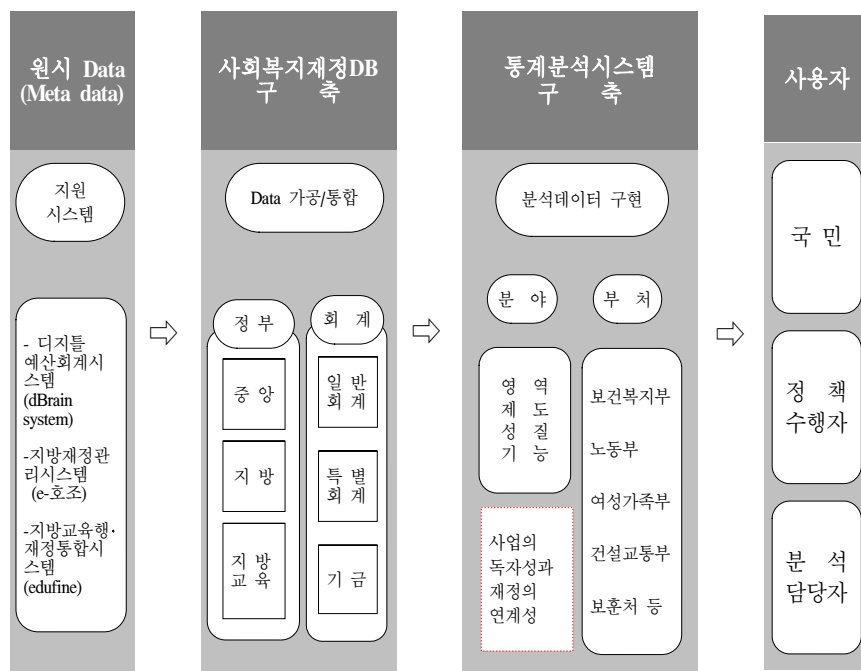
1. DB구축의 내용

DB구축의 내용과 과정 및 흐름도는 아래의 [그림 IV-1]과 같다. 먼저 앞으로 일반정부의 세출예산자료인 원시Data(Meta data)는 중앙·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설정한다. 즉, 중앙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부터,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에서 원시자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한다. 정부범위는 일반정부(지방교육 포함)로 하며, 회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포괄한다. 사회복지재정의 데이터 특성은 일차적으로 각 영역별, 기능별, 사업별, 그리고 성질별의 4개영역으로 구축한다. 다음으로 정부세출자료의 DB구축 방향은 개별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bottom-up방식에 따라 추적하며, 이로써 상·하위 영역의 다양한 통계들을 보다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지방정부의 예산시스템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2008)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예산제도가 연계되어 분석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한다.

[그림 IV-1] 사회복지재정시스템 : 지출측면



2. DB구축의 내용과 분석방향

사회복지재정 Data Base구축 내용을 보면, 예산자료로 할 것이냐 결산자료로 할 것이냐?, 총계로 하느냐 순계로 하느냐?, 나아가 예산자료의 경우 당초예산이나 최종예산이나 등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의 결정은 기초자료 수집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

자료 수집이 가능한 예산총계와 결산총계로만 하며 자료수집이 어려운 순계는 제외한다(표 IV-1 참조).

총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크게 두 종류이다. 먼저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규모는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다. 지방재정연감에는 기능별 총규모, 기능별 대분류를 제시하고 있어 총량의 수치를 본 DB구축에 기준 값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다음 세부기능별 분류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료(세입세출예산서, Home Page, 내부자료 등)에서 수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IV-1〉 지방복지재정 Data Base구축의 내용 및 사용자료

		순 계 ¹⁾		총 계 ¹⁾	
		예 산 ²⁾	결 산	예 산 ²⁾	결 산
전 체 규 모		지방재정연감	지방재정연감	지방재정연감	지방재정연감
기능별 규 모	기본분류	× ³⁾	△ ⁴⁾	지방재정연감	지방재정연감
	기능별 분류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료	
	세부기능별 분류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료	

주: 1) 순계규모는 전국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총계규모는 개별 기초자치단체 파악 시 활용.
 2) 최종예산
 3) ×표는 생산할 수 없음
 4) △표는 일부 생산가능

물론 세부 기능별 분류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에 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2007년도 이전의 품목별 예산과 2008년도 이후의 사업별 예산과의 연계분석 때문이다. 기능별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분류는 품목별·사업별 예산의 공통영역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표 IV-2 참조). 사회복지(노동, 보훈), 보건복지, 교육복지, 그리고 주택복지이다.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영역으

로 먼저 사회복지(노동, 보훈) 아래에는 여덟 개의 세부영역 즉,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그리고 사회복지일반이다. 다음 보건복지 아래에는 두 개의 세부영역으로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안전이다. 이어서 교육복지 아래에는 세 개의 세부영역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이다. 끝으로 주택복지는 위의 ‘사회복지’의 중분류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세부 기능별 분류는 중앙정부의 사업별 예산영역으로 기능별 분류보다 더 세분화 되어 있다.

〈표 IV-2〉 사회복지재정의 세부 기능별 분류

기 본 분 류 (품목별·사업별 예산의 공동영역)	기능별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영역)	세부 기능별 분류 (중앙정부의 사업별 예산영역)
1. 사회복지(노동, 보훈)	1. 기초생활보장 2. 취약계층지원 3. 보육·가족 및 여성 4. 노인·청소년 5. 노동 6. 보훈 7. 주택 8. 사회복지일반	1. 기초생활보장 2. 취약계층지원 3. 공적연금 4. 보육·가족 및 여성 5. 노인·청소년 6. 노동 7. 보훈 8. 주택 1) 국민임대 출자 2) 국민임대용자 3) 저소득 및 근로자 전세자금 9. 사회복지일반
2. 보건복지	1. 보건의료 2. 식품의약품안전	1. 보건의료 2. 건강보험 3. 식품의약품안전
3. 교육복지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평생·직업교육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평생·직업교육 4. 교육일반

이들 기능별 분류와 관련된 세부 제도들은 <표 IV-3> 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IV-3> 기능별 분류의 관련 제도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제 도
품목별·사업별 예산의 공통영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영역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사회복지 (노동, 보훈)	- 기초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 등 사회복지(시설물 설치 포함) - 복지회관 운영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소년소녀가장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016 일반행정)
	- 보육가족 및 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 노인·청소년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 설치 포함)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표 IV-3〉 계속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제 도
품목별·사업별 예산의 공통영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영역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사회복지 (노동, 보훈)	-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등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용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용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관리, 직업훈련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용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업무 - 보훈행정,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 위문 -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인보험 -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승모사업, 묘소단장사업 -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업무
	-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용자지원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 사회복지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 생활체육활성화 및 공원 조성

<표 IV-3> 계속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제 도
품목별·사업별 예산의 공통영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영역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보건의료	-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 운영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 행정비 등
	- 식품의약품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 의약외품, 마약 등
교육복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고등교육)
	-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 평생·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표 IV-3〉 계속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계도
품목별·사업별 예산의 공통영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영역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교육복지	- 평생·직업교육	- 사회교육등 정규 학교교육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포함) 평생교육및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및 운영지원
주택복지	(위의 '사회복지')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도 예산편성계획, 2009.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의 체계는 〈표 IV-4〉와 같이 정리된다.

〈표 IV-4〉 사회복지재정 DB구축의 체계

code		Series Code
1	Year	2004, 2005
2	Source	1. 국가재정 (A + B) 2. 중앙재정(A) 3. 지방재정(B)
3	Branch	1. 기본분류별(영역별) 2. 기능별 3. 재원별 4. 성질별
4	영역별	1. 사회복지 2. 보건의료 3. 교육복지 4. 주택복지

〈표 IV-4〉 계속

code		Series Code
5	기능별	1. 기초생활보장 2. 취약계층지원 3. 보육·가족 및 여성 4. 노인·청소년 5. 노동 6. 보훈 7. 주택 8. 사회복지일반
6	재원의 형태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7	성질별	1. 인건비 2. 물건비 3. 경상이전 4. 자본지출경비 5. 융자금 및 출자금 6. 보전지출 7. 전출금 8. 예비비 및 기타
8	사업의 독자성과 재원의 연계성	1. 중앙정부 자체사업 2.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사업 3. 국비지원금과 지방정부의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금 4.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9	배 분 비 율	1. 국가재정 대비 % 2. 중앙재정 대비 % 3. 지방재정 대비 % 4. GDP 대비 %

DB는 이용자가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DB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DB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업무의 재정성과를 기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이 국민(주민) 1인당 사회복지 재정지출액, 예산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비율, 재정자주도 대비 사회복지 재정비율, 사회복지재정 증가율, 인구증가율 대비 사회복지재정 증가율 등의 지표는 필요하다고 본다(표 IV-5 참조).

〈표 IV-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준 측정 변수

구분	산식	의미
1 국민(주민) 1인당 사회복지재정지출액	$\frac{\text{국가(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지출총액}}{\text{국민(주민)수}}$	국민 또는 주민 1인당 연간 지출되는 사회복지재정지출규모
2 예산대비 사회복지재정지출 비율	$\frac{\text{국가(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규모}}{\text{국가(자치단체)의 예산규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재정지출이 점유하는 비율
3 재정자주도 대비 사회복지재정비율	$\frac{\text{사회복지재정규모}}{\text{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재정자주도)대비 사회복지재정 규모의 비율 -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재정의 경직도가 높은 것을 의미
4 사회복지재정 증가율	$\frac{\text{비교연도의 사회복지재정규모}}{\text{기준연도의 사회복지재정규모}}$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규모의 증가율
5 인구증가율 대비 사회복지재정 증가율	$\frac{\text{사회복지재정증가율 (비교연도사회복지재정규모/기준연도사회복지재정규모)}}{\text{인구증가율 (비교연도인구수/기준연도인구수)}}$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의 증가율 -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의 증가보다 사회복지재정의 증가가 큰 것을 의미

이와 같이 복지수준 측정지표를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재정수요 등 여건이 유사한 지역과 비교해야 비교결과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수준비교를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이 도시화율, 저소득층비율, 장애인구 비율, 보육(육아)인구비율, 노인인구 비율, 주민소득수준,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1인당 지역주민수 등의 지표를 고려 할 수 있다(표 IV-6 참조).

〈표 IV-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준 유형화 변수

구 분	산 식	의 미
1 도시화율 ^{주)}	$\frac{\text{도시 인구수}}{\text{국가(자치단체)인구수}}$	국가(자치단체)의 인구 중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 - 도시화율이 사회복지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2 인 구		
저소득층 비율	$\frac{\text{저소득층 인구(가구수)}}{\text{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구수)}}$	저소득층비율이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영향
장애인구 비율	$\frac{\text{장애인구(가구수)}}{\text{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구수)}}$	장애인구비율이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영향
보육(육아)인구 비율	$\frac{\text{저소득층 인구(가구수)}}{\text{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구수)}}$	저소득층비율이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영향
노인인구비율	$\frac{\text{노인인구(가구수)}}{\text{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구수)}}$	노인인구비율이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영향
3 주민소득수준	$\frac{\text{주민소득(1인당세부담액)}}{\text{자치단체의 인구수(가구 수)}}$	주민의 소득수준이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영향
4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1인당 지역주민 수	$\frac{\text{지역 주민 수}}{\text{국가(자치단체)내 사회복지종사자수}}$	사회복지분야종사자 1인당 지역주민수와 사회복지재정지출과의 관계성

주: 도시화 단계(초기단계 25%미만, 가속화 단계 25~70%, 종착단계 70%이상)

3. 구축된 DB의 성과와 결과분석(2004~2006)

본 연구의 기본분류와 기능별 분류에 사용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항’(조직별 분류)과 ‘세항’(사업목적별 분류)의 정보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기본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항’이나 ‘세항’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성격을 약하게나마 유추해 낼 수 있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를 때 기본분류의 합계는 실제예산과 같지만 기능별 세부분류는 지방자치단체별 분류상의 상위로 사실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소의 한계점을 가지고 아래의 6가지 성과를 제시하게 됨을 밝혀둔다.

가. 품목별·사업별 예산구조 간 연계성 확보

2008년도부터 지방정부가 사업별 예산구조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기능별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로 2004~2006년도의 품목별 예산구조를 사업별 예산구조의 기능별 분류로 제시하고 있다(표 IV-7 참조). 이러한 기능별 분류를 통해 품목별 예산제도의 세부 분류로의 어려운 한계 극복과 함께 사업별 예산과의 연계성을 구축하게 되었다.

〈표 IV-7〉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구조 간 연계성 : 기능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품목별 예산구조 ¹⁾			...	사업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구조 ²⁾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총계		23,937	29,932	34,594		42,511
		(64,695) ³⁾	(71,285)	(77,272)		(43,60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787	7,353	8,347		12,173
	취약계층지원	904	933	1,653		5,320
	보육·가족 및 여성	3,097	4,513	5,585		6,654
	노인·청소년	4,208	2,432	3,535		7,854
	노동	116	106	66		320
	보훈	3	1	-		59
	일반사회복지	2,991	4,610	4,857		474
	기타 ⁴⁾	22	42	13		-
보건	보건의료	1,911	2,508	2,622		2,492
	식품의약품안전	113	122	101		19
	기타 ⁵⁾	(16,631)	(18,578)	(19,421)		-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239	4,636	4,232		6,690
	고등교육	145	188	197		229
	평생·직업교육	1,378	2,316 ⁶⁾	3,199		227
	기타 ⁷⁾	(6,576)	(4,232)	(4,196)		-
주택	국민(공동,주민)주택 등	25	172	187		(1,095)
	기타 ⁸⁾	(17,551)	(18,543)	(19,061)		

주: 1) 최종예산
 2) 당초예산
 3) 사회개발비
 4)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5)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6)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예산규모의 기타금액이 증가됨
 7)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8)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제1공공, 2004, 2005, 2006.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기능별 분류 및 규모 파악

구축된 DB로 사회복지 관련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규모를 파악하였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규모의 파악은 가능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규모는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자체사업의 규모를 기능별로 파악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 중의 하나이다.

〈표 IV-8〉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구조간 연계성: 자원별 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보조사업		자체사업	
		2006년 ¹⁾	2008년 ²⁾	2006년 ¹⁾	2008년 ²⁾
계		20,759	28,901	4,249	10,674
		(32,633) ³⁾	(28,982)	(20,502)	(11,432)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338	11,383	444	493
	취약계층지원	1,052	3,793	411	1,006
	보육·가족 및 여성	4,658	5,993	503	636
	노인·청소년	2,237	6,547	890	1,279
	노동	7	150	7	169
	보훈	-	13	-	46
	일반사회복지	3,486	237	433	114
	기타 ⁴⁾	3	-	7	-
	보건	1,150	496	512	277
식품의약품안전	2	1	14	5	
기타 ⁵⁾	(6,500)	-	(7,099)	-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678	238	740	6,351
	고등교육	-	2	36	121
	평생·직업교육	69	47	150	177
	기타 ⁶⁾	(1,854)	-	(1,125)	-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80	(81)	100	(758)
	기타 ⁷⁾	(3,520)		(8,029)	

주: 1) 최종예산
 2) 당초예산
 3) 사회개발비
 4)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5)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6)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7)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 재가공, 2006, _____,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다. 기초자치단체별 규모비교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분석은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세부 기능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투자의 규모를 기능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IV-9> 는 자치구, 거대도시, 대도시(도청소재지), 그리고 군단위별로 관련 특정지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IV-9>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의 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서울종로구	경기수원시	충북청주시	충남당진군
계		40 (70) ¹⁾	259 (955) ¹⁾	199 (447) ¹⁾	46 (130) ¹⁾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10	1	48	1
	취약계층지원	-	14	10	1
	보육·가족 및 여성	21	61	49	8
	노인·청소년	1	41	44	15
	노동	-	-	1	-
	보훈	-	-	-	-
	일반사회복지	1	59	4	10
	기타 ²⁾	-	-	-	-
보건	보건의료	9	18	17	8
	식품의약품안전	-	-	-	-
	기타 ³⁾	(27)	(361)	(183)	(35)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	34	15	-
	평생·직업교육	-	31	10	2
	기타 ⁴⁾	(-)	(56)	(24)	(22)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	-	-	-
	기타 ⁵⁾	(3)	(279)	(41)	(27)

주: 1) 사회개발비
 2)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3)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4)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5)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본 연구에서 기본분류와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항’(조직별 분류)과 ‘세항’(사업목적별 분류)의 정보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항’이나 ‘세항’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성격을 발췌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예산과목의 단위이며, 또한 대부분 행정조직이 사업유형별로 조직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局) 분류(‘항’)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므로 통일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IV-9>의 경기수원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에는 지출액이 없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부조의 분류가 ‘항’(조직별 분류)의 ‘3. 일반사회복지’ 아래 ‘세항’의 ‘사회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는 빈란이, ‘일반사회복지’에는 ‘기초생활보장’이 포함되어 높은 금액이 계산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치단체는 아래의 <표 IV-10>와 같으며 전국의 13개 지역에 대한 것은 <부표 16>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V-10> 세항구조에 ‘기초생활보장’이 없는 자치단체

지자체명	‘항’	‘세항’
경기 수원시	1. 가정복지 2. 여성정책 3. 일반사회복지	1. 노인복지 2. 연화장 운영 3. 청소년복지 1. 부녀아동상담소 운영 2. 아동복지 3. 여성복지 1. 사회복지 2. 장애인복지
충남 태안군	1. 사회보장 2. 사회복지	1. 사회복지 1. 가정복지 2. 사회복지 3. 여성복지
부산 동구	1. 사회복지	1. 가정복지 2. 사회복지 3. 실업대책 4. 여성복지

라. 예·결산 규모의 분석과 비교

또한 예·결산 규모의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2005년도 사회복지재정분야의 예산규모는 29조 9,320억원, 결산규모는 29조 23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규모는 예산규모의 97.0%를 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예산절감 또는 예산미집행으로 사업을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에 2004년도와 같이 집행률이 높은 것은 전기이월의 사업이 당해 연도에 집행된 것이다.

〈표 IV-11〉 사회복지재정의 예·결산 규모 비교

(단위: 십억, %)

	최종예산규모(A)	결산규모(B)	집행률(B/A×100)
2005년	29,932	29,023	97.0
2004년	23,937	25,598	106.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4;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마.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투자의 배분크기 비교: 전체재정중 복지재정비율

전체재정 중 복지지출에 대한 투자비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선 순위(중요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복지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요도 검토는 다른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과의 상대적 크기로 파악해야 된다. 따라서 이 분석은 복지투자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를 통해 경쟁유발을 유도하고 이로써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의 비율은 수입 및 지출구조의 차이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간 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 IV-12〉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재정투자비율¹⁾ 순위(2006)

(단위: %)

	지 역	비 율
평 균		21.3
순 위		
1위	부산북구	51.2
2위	광주북구	50.5
3위	대구동구	48.9
...		
95위	경기군포시	19.8
...		
100위	전북완주군	19.1
101위	전북남원시	19.0
...		
224위	전북진안군	10.0
...		
229위	강원인제군	6.4
230위	강원평창군 ²⁾	3.7

주: 1) 복지재정투자비율은 복지재정지출액/자체재정지출액 x 100 임.

주: 2) 강원 평창군은 2006년도 큰 수해(도로, 하천, 주택, 다리, 교량의 붕괴유실, 농경지의 매몰과 유실)로 복구를 위한 국토자원보존개발비(5,464억원)가 커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비가 낮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투자의 차이 비교 : 1인당 지출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자치단체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출액은 복지재정의 지출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인구구성과는 관계없이 전 주민의 수만 반영한 평균적인 복지수준으로 인구규모를 감안 자치단체 간 비교지표이다.

〈표 IV-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06)

(단위: 원)

	지 역	1인당 지출액
평균		296,933
순위		
1위	강원인제군 ^{주)}	1,326,341
2위	경북영양군 ^{주)}	1,099,586
3위	경북울릉군 ^{주)}	1,080,819
...		
149위	경남진주시	310,099
...		
172위	광주서구	240,204
173위	경기수원시	239,813
174위	경기도산시	237,499
...		
230위	서울송파구	110,716

주: 인제군은 종합복지타운 건설로 30억원(전체재정의 7%, 2006년도)을, 영양군은 사회종합회관 건설에 26억원(전체재정의 12%)을, 울릉군은 장사시설인 납골당 건설에 39억원(전체재정의 35%)을 주민의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지출하여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지역간 비교는 재정규모, 인구 수, 재정수입 등을 고려한 균형된 비교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인구규모를 감안한 기준으로는 대도시, 일반시, 군, 그리고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1인당 지출액을 비교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본다. 본 연구는 구축된 DB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분석내용과 성과내용에 관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활용이 높은 통계나 지표를 생산할 계획이다.

V.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을,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의 행정과 재정을 통합 구축한 원-스톱 포털 시스템인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국가재정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분석 및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재무정보나 사업별 모니터링을 포함한 체계적 재정분석들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먼저 세출예산의 세부 기능별 분류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이후에 대해서만 제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 시기(중앙정부는 2006년·지방정부는 2007년도 이전)에는 세부 기능별 분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간 연계분석이 어려우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내의 재정의 추이나 분석에 분절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다음 품목별 예산제도 시기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품목별 예산제도 시점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연계성이 없어 통합분석 등 다양한 세부정보를 분석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시스템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품목과 사업예산제도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DB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5차 년도에 걸쳐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1차 연도에는 복지재정의 이론정리(개념, 범위 등)와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차

연도에는 지방정부의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제도의 연계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3차 연도에는 중앙정부 및 국가단위의 사회복지재정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에, 4차 연도에는 사회복지재정투자의 공개Program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 5차 연도에는 사업완성을 위한 제반 활동과 Homepage상에서 페이지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년도에는 최신자료 갱신(Update)과 공개Program개발과 개선을 계속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사회복지의 개념적 범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사회복지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범위에 대해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IMF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사회복지재정의 구체적 범위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 관련 체육, 그리고 (의무)교육까지 설정하여 국가의 재정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을 시도하였다. 참고로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교육정책, 주택과 지역사회개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사회복지재정자료를 축적하고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해 기본 데이터를 기본분류별, 기능분류별, 그리고 회계별로 구축하였으며 각 세부체계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분류는 사회복지재정을 구성하는 분야를 대분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2008년)의 세출구조와 같다. 이러한 분류는 세출예산데이터의 ‘관’을 기준으로 각 사업 분야를 검토하여 분류하였다. 분류과정은 ‘관’을 기준으로 네 개의 기본분류, 즉, 1. 사회복지, 2. 보건, 3. 교육, 4. 주택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1. 사회복지’에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그리고 '일반사회복지'로 나누었다. '2. 보건'에는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안전'을, '3. 교육'에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초중고결식아동)', '교육재정(장학금, 지방교육재정교육관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용지사업(부담금)',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체육시설(수련관, 인재육성, 체육행정 등)',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을, '4. 주택'에는 '국민주택(시민아파트)', '공공임대', '공동주택(주민주택)', '주택용자관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회계별 분류는 정부의 세출예산이 어떠한 회계구조 체계에서 지출되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4. 공기업회계로 하였다. 끝으로 예산의 사업별 분류는 크게 세 가지, 즉, 1. 보조사업, 2. 자체사업, 3. 기타(경상적경비, 예비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로 구분하였다.

구축된 DB의 결과분석을 통해 본 성과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품목별·사업별 예산구조 간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즉 구축된 DB로 2004~2006년도의 품목별 예산구조를 사업별 예산구조의 기능별 분류와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를 통해 품목별 예산제도의 세부 분류로의 어려운 한계 극복과 함께 사업별 예산과의 연계성을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분류 및 규모를 파악하였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규모의 파악은 가능하였으나 지방정부의 기능별 자체사업의 규모분석이 어려웠다. 자체사업의 규모를 기능별로 파악한 것은 본 연구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이다. 셋째, 234개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기능별 규모의 분석과 비교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투자의 규모를 기능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넷째, 예·결산 규모의 분석과 비교이다. 2005년도 사회복지재정분야의 예산규모는 29조 9,320억원, 결산규모는 29조 23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규모는 예산규모의 97.0%를 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예산절감 또는 예산미집행으로 사

업을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투자의 배분크기의 비교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지표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전체재정 중 복지재정의 비율이다. 이 분석은 복지투자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배분의 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비교를 통해 경쟁유발을 통한 사회복지기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1인당 복지지출액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자치단체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출액은 복지재정의 지출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인구구성과는 관계없이 전주민의 수를 반영한 평균적인 복지수준을 의미한다.

이상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재정의 범위와 분류의 한계이다.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본분류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기능분류까지 실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전략목표이지만 예산의 하위과목에 대한 기본정보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능분류는 '세항', '세세항', 또는 '목' 등의 정보로 실시하였는데 예산과목의 정보 불충분이나 2가지 이상의 중복분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분류상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된 부분들이 있다. 예로서 사회복지지원(노인+장애인+청소년_노인), 복지여성관리(의료급여기금관리_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지원(정신질환+부랑인보호-보건) 등이다. 데이터 구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개별사업의 사업목적 등을 조사하는 등 별도의 노력과 시간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각 사업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아울러 누락이나 중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분석은 기능별, 자원별, 그리고 재정의 성질별로는 분류하였으나 수혜대상별로는 분류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원시

재정자료의 세부 정보의 부족 또는 대상에 대한 중복 때문이다.

셋째, 재정의 총계규모 파악은 가능하였으나 순계규모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시도-시군구) 외부거래, 지방자치단체내의 회계 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의 중복 계상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총계규모와 중복 계상분을 공제한 순계규모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복부분을 가려 낼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정보부족으로 순계규모는 구축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개별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총계규모의 측면에서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국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넷째, 기본분류와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항’(조직별 분류)과 ‘세항’(사업목적별 분류)의 정보에 의존하여 실시함으로써 명료하지 못 하였다. 그 이유는 ‘항’이나 ‘세항’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성격을 발췌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예산과목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를 때 경기도 수원시를 포함한 12개 자치단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부조가 ‘항’이나 ‘세항’에 독립항목으로 없어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DB구축에서 교육재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은 포함되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지방교육비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유는 지방교육재정의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의 흐름과 분류방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연구원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참고문헌

- 강윤희,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3), 2000.
- 고경환·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고경환 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 권순원, 「한국적 복지이념 및 복지모형 정립(I)」, 1994.
- 김교성·이재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2000.
- 김미혜·정진경,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9(1), 2003.
- 김태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지출구조 변화: 사회복지비 지출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 기획예산처, 『나라살림』, 2005; 2006.
- 노인철·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디지털예산회계추진기획단, 내부자료, 2006.
- 대구광역시, 경기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관련 내부자료(2007)
- 박능후,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9, 2002.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시 복지예산 분석』, 2005.
- 박천익, 「생산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모형」, 『사회과학연구』 8(2): 145-172.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예산』, 각 연도.

11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윤영진, 「사회복지재정의 개념·범위·분류」, 윤영진 외,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서울: 나눔, 2007

윤영진 외,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정책 기획과제 연구보고서』, 정책기획위원회, 2006

정경배, 「복지국가의 생산성 균형모형」, 『지역복지정책』 15: 39-55,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2003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 내부자료, 2007.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02; 2005.

_____, 『사업별예산제도 매뉴얼』, 2007.

_____,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_____, 『지방통합재정수지분석 매뉴얼』, 2005.

_____,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_____,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각 연도

_____, 『2009년도 예산편성계획』, 2009.

OECD, *Social Expenditure 1980-2003: Interpretative Guide of SOCX*, 200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ILO <http://www.ilo.org>

IMF <http://www.imf.org>

OECD <http://www.oecd.org>

부 록

〈부표 1〉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4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¹⁾
계		23,937 (64,695) ²⁾	9,232 (12,429)	9,180 (26,917)	5,217 (23,185)	308 (2,16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787	3,922	1,145	650	69
	취약계층지원	904	503	300	90	12
	보육·가족 및 여성	3,097	1,182	902	964	49
	노인·청소년	4,208	1,602	1,737	832	38
	노동	116	10	81	25	-
	보훈	3	-	-	3	-
	일반사회복지	2,991	1,574	701	677	39
	기타 ³⁾	22	5	2	16	-
	보건	1,911	287	486	1,096	43
보건	식품의약품안전	113	-	97	16	-
	기타 ⁴⁾	(16,631)	(1,255)	(5,267)	(9,020)	(1,089)
	교육	3,239	139	2,356	694	51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239	139	2,356	694	51
	고등교육	145	-	145	-	-
	평생·직업교육	1,378	9	1,228	134	7
	기타 ⁵⁾	(6,576)	(850)	(3,848)	(1,787)	(91)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25	1	2	21	-
	기타 ⁶⁾	(17,551)	(1,092)	(8,622)	(7,161)	(676)

주: 1) 지방채, 양여금, 교부세,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4,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116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부표 2〉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4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기금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23,937	1,688	19,073	3,120	56
계		(64,695) ¹⁾	(2,514)	(39,389)	(9,841)	(12,95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787	231	3,469	2,088	-
	취약계층지원	904	21	881	2	-
	보육·가족 및 여성	3,097	159	2,937	1	-
	노인·청소년	4,208	232	3,405	570	-
	노동	116	74	20	22	-
	보훈	3	3	-	-	-
	일반사회복지	2,991	348	2,475	168	-
	기타 ²⁾	22	4	10	7	-
보건	보건의료	1,911	185	1,604	66	56
	식품의약품안전	113	112	-	1	-
	기타 ³⁾	(16,631)	(233)	(7,824)	(2,163)	(6,411)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239	284	2,873	82	-
	고등교육	145	32	36	77	-
	평생·직업교육	1,378	4	1,360	15	-
	기타 ⁴⁾	(6,576)	(266)	(6,117)	(193)	(-)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25	-	2	23	-
	기타 ⁵⁾	(17,551)	(327)	(6,375)	(4,365)	(6,484)

주: 1) 사회개발비

2)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급, 사무비 등

3)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4)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5)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4,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부표 3〉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4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보 조 사 업	자 체 사 업	기타 ¹⁾
		23,937	14,672	2,577	6,689
계		(64,695) ²⁾	(23,745)	(19,111)	(21,839)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5,787	4,975	253	558
	취약계층지원	904	785	78	41
	보육·가족 및 여성	3,097	2,490	295	312
	노인·청소년	4,208	3,036	632	540
	노동	116	18	16	82
	보훈	3	-	-	3
	일반사회복지	2,991	2,243	234	514
	기타 ³⁾	22	8	5	8
보건	보건의료	1,911	600	367	944
	식품의약품안전	113	1	22	90
	기타 ⁴⁾	(16,631)	(4,442)	(6,943)	(5,245)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239	468	581	2,190
	고등교육	145	3	18	124
	평생·직업교육	1,378	38	72	1,268
	기타 ⁵⁾	(6,576)	(1,791)	(1,360)	(3,425)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25	6	3	16
	기타 ⁶⁾	(17,551)	(2,840)	(8,231)	(6,480)

주: 1) 경상적 경비, 예비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4,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부표 4〉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결산규모: 2004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기 금 회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회 계
		25,598	1,779	20,932	2,886	-
계		(57,739) ¹⁾	(2,683)	(38,541)	(7,635)	(8,880)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6,142	231	3,469	2,443	-
	취약계층지원	1,193	20	1,170	3	-
	보육·가족 및 지원	2,986	163	2,816	7	-
	노인·청소년	2,150	230	1,907	13	-
	노동	152	121	19	12	-
	보훈	3	2	-	-	-
	일반사회복지	3,914	392	3,374	148	-
	기타 ²⁾	10	2	7	1	-
보건	보건의료	1,878	182	1,676	19	-
	식품의약품안전	122	122	-	-	-
	기타 ³⁾	(14,656)	(252)	(7,485)	(1,786)	(5,134)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394	304	2,954	136	-
	고등교육	87	1	4	82	-
	평생·직업교육	3,557	9	3,534	14	-
	기타 ⁴⁾	(4,193)	(275)	(3,744)	(174)	-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8	-	1	8	-
	기타 ⁵⁾	(13,292)	(377)	(6,380)	(2,789)	(3,746)

주: 1) 사회개발비

2)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3)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4)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5)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4,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부표 5〉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결산규모: 2004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보 조 사 업	자 체 사 업	기타 ¹⁾
		25,598	14,193	2,517	8,887
계		(57,739) ²⁾	(23,292)	(16,826)	(17,62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6,142	5,494	129	519
	취약계층지원	1,193	927	220	45
	보육·가족 및 지원	2,986	2,399	270	318
	노인·청소년	2,150	1,428	414	307
	노동	152	10	66	76
	보훈	3	-	-	3
	일반사회복지	3,914	2,893	273	748
	기타 ³⁾	10	5	4	2
보건	보건의료	1,878	594	395	890
	식품의약품안전	122	-	13	109
	기타 ⁴⁾	(14,656)	(4,386)	(5,885)	(4,385)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394	411	649	2,334
	고등교육	87	2	19	66
	평생·직업교육	3,557	25	65	3,467
	기타 ⁵⁾	(4,193)	(1,717)	(1,419)	(1,058)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8	6	-	2
	기타 ⁶⁾	(13,292)	(2,996)	(7,005)	(3,291)

주: 1) 경상적 경비, 예비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4,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120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부표 6〉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¹⁾
		29,932	9,407	12,466	6,606	1,453
계		(71,285) ²⁾	(14,936)	(27,771)	(25,831)	(2,74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353	4,474	1,530	779	570
	취약계층지원	933	186	496	188	63
	보육·가족 및 여성	4,513	1,456	1,510	1,360	186
	노인·청소년	2,432	487	783	971	192
	노동	106	1	94	7	5
	보훈	1	-	-	1	-
	일반사회복지	4,610	2,140	1,476	859	135
	기타 ³⁾	42	3	2	13	25
보건	보건의료	2,508	428	715	1,215	150
	식품의약품안전	122	-	106	15	-
	기타 ⁴⁾	(18,578)	(3,388)	(4,859)	(9,842)	(490)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4,636	169	3,385	970	112
	고등교육	188	-	187	-	1
	평생·직업교육	2,316	7	2,086	209	14
	기타 ⁵⁾	(4,232)	(633)	(1,515)	(1,837)	(246)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72	57	95	20	-
	기타 ⁶⁾	(18,543)	(1,508)	(8,931)	(7,546)	(558)

주: 1) 지방채, 양여금, 교부세,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부표 7〉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계	기 금 회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회 계
	계	29,932	1,600	24,557	3,707	69
		(71,285) ¹⁾	(2,441)	(45,244)	(9,943)	(13,65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353	170	4,087	3,097	-
	취약계층지원	933	20	911	2	-
	보육·가족 및 여성	4,513	204	4,304	5	-
	노인·청소년	2,432	175	2,229	28	-
	노동	106	91	13	2	-
	보훈	1	-	-	-	-
	일반사회복지	4,610	347	4,072	191	-
	기타 ²⁾	42	-	32	10	-
보건	보건의료	2,508	164	2,219	55	69
	식품의약품안전	122	121	-	-	-
	기타 ³⁾	(18,578)	(247)	(9,065)	(2,097)	(7,169)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4,636	302	4,290	44	-
	고등교육	188	1	99	88	-
	평생·직업교육	2,316	4	2,296	16	-
	기타 ⁴⁾	(4,232)	(206)	(3,822)	(203)	(-)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72	-	4	168	-
	기타 ⁵⁾	(18,543)	(388)	(7,800)	(3,936)	(6,419)

주: 1) 사회개발비

2)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3)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4)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5)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1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부표 8〉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 ¹⁾
계		29,932 (71,285) ²⁾	17,232 (28,352)	3,543 (20,299)	9,156 (22,633)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7,353	6,440	332	581
	취약계층지원	933	551	246	136
	보육·가족 및 여성	4,513	3,660	432	421
	노인·청소년	2,432	1,544	569	319
	노동	106	5	4	97
	보훈	1	-	-	1
	일반사회복지	4,610	3,326	442	842
	기타 ³⁾	42	22	16	4
보건	보건의료	2,508	962	491	1,055
	식품의약품안전	122	2	18	101
	기타 ⁴⁾	(18,578)	(5,940)	(7,438)	(5,200)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4,636	603	756	3,277
	고등교육	188	-	40	148
	평생·직업교육	2,316	61	97	2,157
	기타 ⁵⁾	(4,232)	(1,695)	(1,448)	(1,089)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72	57	99	16
	기타 ⁶⁾	(18,543)	(3,485)	(7,870)	(7,188)

주: 1) 경상적 경비, 예비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담 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부표 9〉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결산규모: 2005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기 회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회 계
		29,023	1,666	24,179	3,178	-
계		(64,265) ¹⁾	(2,539)	(43,760)	(7,919)	(10,04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6,807	247	4,091	2,468	-
	취약계층지원	876	29	845	1	-
	보육·가족 및 여성	4,388	201	4,178	9	-
	노인·청소년	2,894	206	2,236	451	-
	노동	121	108	13	-	-
	보훈	3	3	-	-	-
	일반사회복지	4,268	255	3,858	156	-
	기타 ²⁾	9	-	7	1	-
보건	보건의료	2,259	178	2,079	2	-
	식품의약품안전	140	140	-	-	-
	기타 ³⁾	(16,642)	(245)	(8,792)	(1,863)	(5,742)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542	297	3,205	41	-
	고등교육	120	1	94	25	-
	평생·직업교육	3,586	2	3,569	15	-
	기타 ⁴⁾	(4,078)	(215)	(3,637)	(225)	(-)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1	-	2	9	-
	기타 ⁵⁾	(14,522)	(413)	(7,152)	(2,653)	(4,304)

주: 1) 사회개발비
 2)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3)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4)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5)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124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부표 10〉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결산규모: 2005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보 조 사 업	자 체 사 업	기타 ¹⁾
		29,023	16,764	3,026	9,234
계		(64,265) ²⁾	(27,455)	(18,075)	(18,735)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6,807	6,020	176	610
	취약계층지원	876	503	230	142
	보육·가족 및 여성	4,388	3,596	390	401
	노인·청소년	2,894	2,005	550	339
	노동	121	5	2	114
	보훈	3	-	2	1
	일반사회복지	4,268	3,156	407	705
	기타 ³⁾	9	5	2	1
보건	보건의료	2,259	875	441	943
	식품의약품안전	140	2	20	118
	기타 ⁴⁾	(16,642)	(5,710)	(6,756)	(4,176)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3,542	533	695	2,313
	고등교육	120	-	25	95
	평생·직업교육	3,586	55	83	3,448
	기타 ⁵⁾	(4,078)	(1,720)	(1,400)	(957)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1	6	1	3
	기타 ⁶⁾	(14,522)	(3,261)	(6,893)	(4,368)

주: 1) 경상적 경비, 예비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부표 11〉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의 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5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서울종로구	경기수원시	충북청주시	충남당진군
		39 (91) ¹⁾	230 (764) ¹⁾	152 (380) ¹⁾	36 (172) ¹⁾
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8	- ⁶⁾	41	1
	취약계층지원	-	14	40	-
	보육·가족 및 여성	21	40	39	14
	노인·청소년	-	38	2	10
	노동	-	-	2	-
	보훈	-	-	-	-
	일반사회복지	1	54	4	3
	기타 ²⁾	-	-	-	-
보건	보건의료	8	14	9	7
	식품의약품안전	-	-	-	-
	기타 ³⁾	(31)	(299)	(169)	(39)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	27	9	-
	평생·직업교육	-	42	7	-
	기타 ⁴⁾	(-)	(56)	(23)	(7)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	-	-	-
	기타 ⁵⁾	(21)	(179)	(36)	(90)

주: 1) 사회개발비

2)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3)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4)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5)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6) 지역별 항목 세항의 예산분류방식의 차이로 기본분류의 합계는 타당하지만 기능별 세부분류는 맞지 않는 경우가 13개 자치단체임.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10억원이 있으나 일반사회복지로 분류되어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126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부표 12〉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복지재정투자비율^{주)} 순위: 2005년

(단위: %)

	지 역	비 율
평 균		17.6
순 위		
1위	부산 북구	50.4
2위	광주 북구	47.8
3위	대구 달서구	45.2
...		
95위	서울 송파구	18.2
...		
100위	전남 목포시	17.7
101위	전북 임실군	17.5
...		
224위	경북 울릉군	9.8
...		
233위	전북 장수군	6.6
234위	충남 계룡시	6.0

주: 복지재정투자비율은 복지재정 지출액/자체재정지출액 x 100 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부표 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사회복지비 비교(2005)

(단위: 원)

	지 역	1인당 지출액
평 균		260,190
순 위		
1위	경북 울릉군	1,263,560
2위	강원도 양구군	1,183,986
3위	강원도 화천군	1,146,804
...		
149위	전북 전주시	260,120
...		
172위	충남 계룡시	213,475
173위	광주 북구	212,135
174위	부산 북구	207,707
...		
234위	서울 송파구	88,972

주: 울릉군은 태풍과 풍랑피해에 따른 재해구호비(사회복지관련 이재민 구호, 민간이주비 등)의 지출이 높았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128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부표 14〉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¹⁾
		34,594	12,267	14,253	7,300	772
계		(77,272) ²⁾	(19,364)	(29,049)	(27,600)	(1,258)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8,347	5,644	1,797	867	39
	취약계층지원	1,653	528	791	188	147
	보육·가족 및 여성	5,585	1,999	1,890	1,589	107
	노인·청소년	3,535	827	1,245	1,279	184
	노동	66	1	54	5	6
	보훈	-	-	-	-	-
	일반사회복지	4,857	2,323	1,608	822	104
	기타 ³⁾	13	2	2	9	-
보건	보건의료	2,622	587	715	1,234	87
	식품의약품안전	101	-	33	13	55
	기타 ⁴⁾	(19,421)	(4,016)	(5,043)	(10,137)	(226)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4,232	266	2,914	1,011	41
	고등교육	197	-	197	-	-
	평생·직업교육	3,199	13	2,910	272	3
	기타 ⁵⁾	(4,196)	(854)	(1,490)	(1,752)	(100)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87	78	97	12	-
	기타 ⁶⁾	(19,061)	(2,227)	(8,263)	(8,411)	(160)

주: 1) 지방채, 양여금, 교부세,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2006.

〈부표 15〉 사회복지분야의 회계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기금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기업 회 계
		34,594	1,402	28,844	4,314	36
계		(77,272) ¹⁾	(2,534)	(49,180)	(11,370)	(14,188)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8,347	98	4,590	3,658	-
	취약계층지원	1,653	19	1,624	10	-
	보육·가족 및 여성	5,585	182	5,403	-	-
	노인·청소년	3,535	196	3,281	58	-
	노동	66	48	17	1	-
	보훈	-	-	-	-	-
	일반사회복지	4,857	374	4,245	237	-
	기타 ²⁾	13	-	6	7	-
보건	보건의료	2,622	163	2,410	14	36
	식품의약품안전	101	100	1	-	-
	기타 ³⁾	(19,421)	(289)	(9,606)	(2,180)	(7,346)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4,232	208	3,985	39	-
	고등교육	197	1	107	90	-
	평생·직업교육	3,199	12	3,170	17	-
	기타 ⁴⁾	(4,196)	(341)	(3,705)	(149)	(-)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87	-	3	184	-
	기타 ⁵⁾	(19,061)	(502)	(7,025)	(4,727)	(6,807)

주: 1) 사회개발비

2)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3)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4)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5)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댐주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2006.

130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부표 16〉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별·기능별 (최종)예산규모: 2006년

(단위: 십억)

기본분류	기능별분류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 ¹⁾
		34,594	20,759	4,249	9,587
	계	(77,272) ²⁾	(32,633)	(20,502)	(24,137)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8,347	7,338	444	565
	취약계층지원	1,653	1,052	411	190
	보육·가족 및 여성	5,585	4,658	503	425
	노인·청소년	3,535	2,237	890	409
	노동	66	7	7	53
	보훈	-	-	-	-
	일반사회복지	4,857	3,486	433	938
	기타 ³⁾	13	3	7	4
보건	보건의료	2,622	1,150	512	960
	식품의약품안전	101	2	14	84
	기타 ⁴⁾	(19,421)	(6,500)	(7,099)	(5,821)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4,232	678	740	2,813
	고등교육	197	-	36	161
	평생·직업교육	3,199	69	150	2,980
	기타 ⁵⁾	(4,196)	(1,854)	(1,125)	(1,217)
주택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187	80	100	7
	기타 ⁶⁾	(19,061)	(3,520)	(8,029)	(7,512)

주: 1) 경상적 경비, 예비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상환, 기타 포함.
 2) 사회개발비
 3) 내무행정, 관광 및 지역경제개발, 제지출금, 사무비 등
 4) 생활환경개선, 상하수도관리, 종말처리장, 청소관리, 수질환경관리, 환경보존·보호 등
 5) 문화예술, 문화공보·홍보, 체육진흥관리, 문화관광 등
 6) 도시개발 및 주택기획·지역사회개발, 공원녹지관리, 주택재개발사업비, 뚝방변마을지원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2006.

〈부표 17〉 세항에 '기초생활보장'이 없는 13개 자치단체(2005)

지자체명	항명	세항명
	1. 가정복지	1. 노인복지 2. 연화장운영 3. 청소년복지
경기 수원시	2. 여성정책	1. 부녀아동상담소운영 2. 아동복지 3. 여성복지
	3. 일반사회복지	1. 사회복지 2. 장애인복지
충남 태안군	1. 사회보장	1. 사회복지
	2. 사회복지	1. 가정복지 2. 사회복지 3. 여성복지
부산 동구	1. 사회복지	1. 가정복지 2. 사회복지 3. 실업대책 4. 여성복지
충남 계룡시	1. 사회복지	1. 사회복지 2. 가정복지
강원 태백시	1. 사회복지	1. 노인복지 2. 여성복지 3. 일반사회복지 4. 장애인복지 5. 청소년복지
경기 양주시	1. 일반사회복지	1. 가정복지 2. 기금운영 3. 사회복지 4. 여성복지 5. 청소년복지
경남 양산시	1. 가정복지	1. 여성복지 2. 아동복지 3. 청소년복지
	2. 일반사회복지	1. 노인복지 2. 사회복지
충남 서천군	1. 복지여성	1. 노인복지 2. 사회복지 3. 여성복지 4. 청소년복지
경남 남해군	1. 사회복지	1. 노인복지 2. 복지관관리 3. 사회복지 4. 아동복지 5. 여성복지 6. 자원봉사 7. 장묘문화 8. 청소년복지
경남 합천군	1. 사회복지	1. 노인복지 2. 사회보장 3. 여성복지 4. 종합사회복지관운영
	2. 청소년복지	1. 청소년복지
경북 청송군	1. 사회복지	1. 가정복지 2. 사회복지 3. 여성정책
	2. 지역경제	1. 지역경제
전북 완주군	1. 사회복지행정	1. 가정복지관리 2. 노인복지관리 3. 사회복지관리 4. 여성복지관리
남제주군	1. 가정복지	1. 가정복지 2. 노인복지 3. 여성복지 4. 여성회관운영 5. 유아복지
	2. 일반사회복지	1. 복지관운영 2. 사회복지 3. 장애인복지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로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미정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미정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미정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경	6,000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지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6,000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II)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육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i>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삼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